
2013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2013. 1.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시행계획의 개요	1
II. 해양사고 발생현황	5
III. '12년 성과 및 반성	13
IV. '13년도 추진계획	19
V. 투자계획	149
(붙임) 과제 별 소요예산	153



시행계획의 개요

I. 시행계획의 개요

- (의의) ‘해사안전시행계획’은 범정부적 해사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12~‘16)’을 구체화하는 연도별 실천계획임

* 「해사안전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적용 범위 및 대상 】

- *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 EEZ 및 대륙붕을 포함한 해역
- *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외국적 선박, EEZ·대륙붕내 해양시설 등

- (주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병무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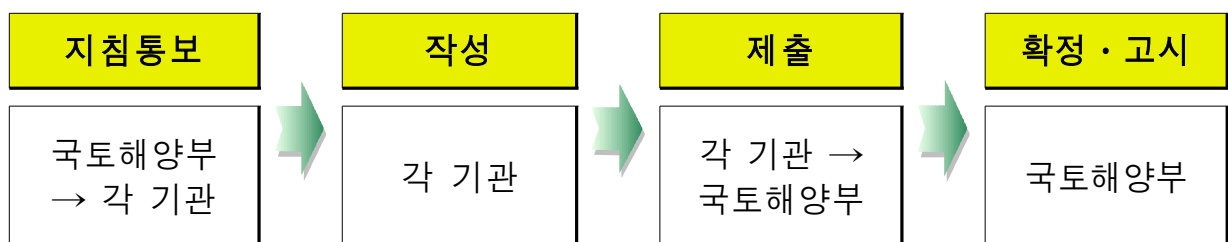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 (절차)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소관분야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의 추진과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 국토해양부는 이를 종합·조정하여 각 기관에 의견조회를 거친 후 연간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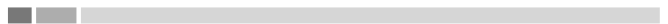
<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해양사고 발생현황

1. 해양사고 현황
2. 해역별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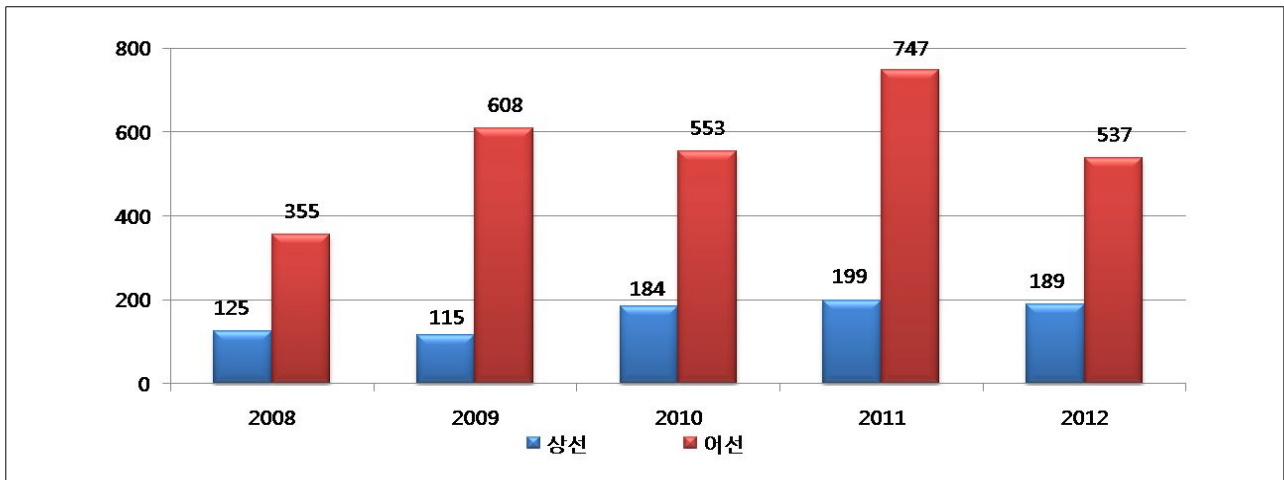
II. 해양사고 발생현황

1. 해양사고 현황

□ (전체) '12년 해양사고는 전년대비 23.3% 감소

○ 상선사고는 5.0%(199→189건) 감소, 어선사고는 28.1%(747→537건) 감소

(단위 : 건)



주: '12년 해양사고 통계는 잠정치 임

□ (사고율) '12년 등록척수 대비 상선 사고율은 3.1%, 어선 0.9%

(단위 : 척, 천톤, %)

구분	합계			상선			어선		
	등록 척수(천톤)	사고 척수	사고 율	등록 척수(천톤)	사고 척수	사고 율	등록 척수(천톤)	사고 척수	사고 율
2008	88,854 (16,076)	636	0.7	8,088 (15,455)	201	2.5	80,766 (621)	435	0.5
2009	86,087 (14,512)	915	1.1	8,374 (13,917)	190	2.3	77,713 (595)	725	0.9
2010	86,015 (14,867)	961	1.1	9,041 (14,266)	289	3.2	76,974 (601)	672	0.9
2011	85,025 (14,278)	1,197	1.4	9,396 (13,671)	309	3.3	75,629 (607)	888	1.2
2012	84,790 (13,670)	941	1.1	9,435 (13,059)	288	3.1	75,355* (611*)	653	0.9
전년대비 (증감율)	△ 235 (△ 0.3)	△ 256 (△ 21.4)	-	39 (0.4)	△ 21 (△ 6.8)	-	△ 274 (△ 0.4)	△ 235 (△ 26.5)	-

주: * '12년 등록척수는 잠정치 임

□ (선종별) '12년 30.6%가 상선, 69.4%가 어선에서 발생

-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하였으나 여객선, 유조선은 5%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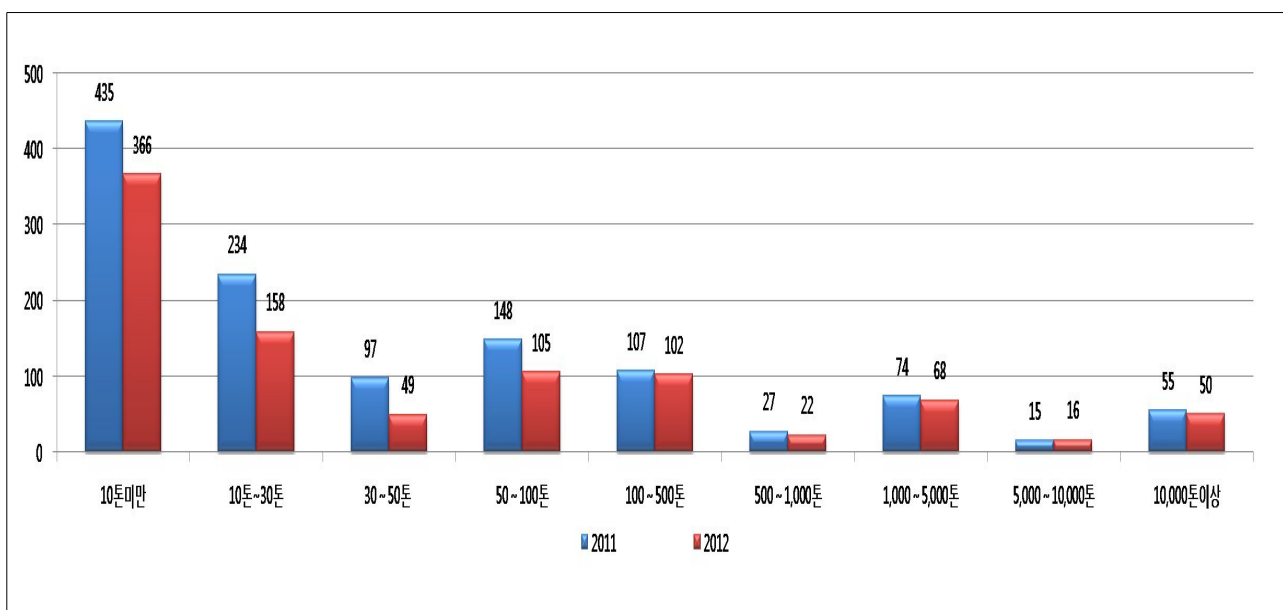
(단위 : 척, %)

구분	어선	상선						합계
		소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기타	
2008	435	201	19	63	25	52	42	636
2009	725	190	7	83	18	35	47	915
2010	672	289	18	107	42	65	57	961
2011	888	309	17	96	37	75	84	1,197
2012	653	288	24	86	39	65	74	941
합계	3,373	1,277	85	435	161	292	304	4,650
5년 평균 (비중)	675 (72.6)	255 (27.4)	17 (1.8)	87 (9.4)	32 (3.5)	58 (6.2)	61 (6.5)	930 (100.0)
전년대비 (증감율)	△235 (△26.5)	△21 (△6.8)	7 (41.2)	△10 (△10.4)	2 (5.4)	△10 (△13.3)	△10 (△11.9)	△259 (△21.4)

□ (톤급별) '12년 100톤 미만 선박의 사고척수가 전체사고의 72.4% 차지

- 전년대비 100톤 미만 선박사고는 25.8%(914 → 678척) 감소,
100톤 이상 선박사고는 7.2%(278 → 258척)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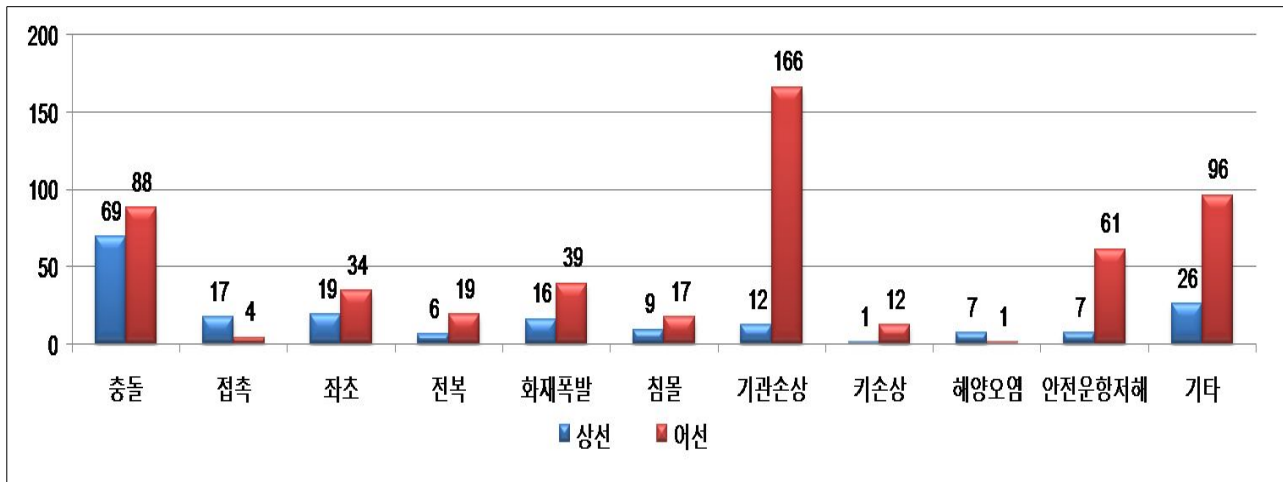
(단위 : 척)



주: '12년 톤급 미상 5척 제외

□ (유형별) 상선은 충돌사고, 어선은 기관손상이 주로 발생

(단위 : 건)



□ (주요사고) 인명사상, 선박전손, 해양오염 등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해양사고는 '12년 242건(상선 69건, 어선 173건) 발생

○ 전년대비 주요사고는 19.3%(300 → 242건) 감소

(단위 : 건, %)

구분	상선				어선				합계
	인명 피해 ¹⁾	전손 등 ²⁾	해양 오염	소계	인명 피해 ¹⁾	전손 등 ²⁾	해양 오염	소계	
2008	23	37	-	60	50	65	-	115	175
2009	22	23	2	47	68	76	-	144	191
2010	28	33	5	66	74	71	2	147	213
2011	33	24	8	65	117	118	0	235	300
2012	31	31	7	69	88	84	1	173	242
총합계	137	148	22	307	397	414	3	814	1,121
(비중)	(12.2)	(13.2)	(2.0)	(27.4)	(35.4)	(36.9)	(0.3)	(72.6)	(100.0)
5년 평균	27	30	4	61	79	83	1	163	224
전년대비	△2	7	△1	4	△29	△34	1	△62	△58
(증감율)	(△6.1)	(29.2)	(△12.5)	(△6.2)	(△24.8)	(△28.8)	(100.0)	(△26.4)	(△19.3)

주 1) 인명사상 : 부상(1명이상) 및 사망·실종자 발생 사고건수

2) 전손 등 : 실제전손, 추정전손, 침몰 후 인양 및 중파 등 피해규모가 큰 사고건수

3)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를 KMI에서 재 구성

□ (인명사상) '12년 인명사상은 총 229명(상선 31.9%, 어선 68.1% 차지)

○ 전년대비 사망·실종자 수는 26.4% 감소(148→109명)

(단위 : 명, %)

구 분	상선		어선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2008	46	74	67	53
2009	36	65	71	71
2010	46	14	130	57
2011	41	36	107	96
2012	30	43	81	75
5년 평균	40	46	91	70
전년대비 (증감율)	△11 (△26.8)	7 (19.4)	△26 (△24.3)	△21 (△21.9)

○ 지난 5년간 인명사상은 주로 충돌사고로 발생(상선 31.9%, 어선 68.1%)

(단위 : 명)

사고종류	상선					어선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충돌	59	35	21	25	10	85	77	86	90	49
접촉	4	3	1	7	22	0	0	1	9	3
좌초	21	0	0	0	0	0	1	2	3	21
전복	1	1	2	10	1	7	25	21	8	14
화재폭발	5	2	0	11	23	1	9	16	10	20
침몰	6	5	10	0	1	14	13	48	14	2
기관손상	7	0	0	0	0	0	2	0	1	0
인명사상	17	49	26	23	16	12	13	13	67	43
기타	0	6	0	1	0	1	2	0	1	4
합계	120	101	60	77	73	120	142	187	203	156

□ (원인별) '12년 해양사고 원인의 92.6%가 선원의 인적과실

○ 인적과실 중 경계소홀, 조선 부적절이 57.9% 차지

(단위 : 개)

구분		상선					어선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인적 과실	경계소홀	53	37	58	71	51	54	69	75	64	93
	당직근무태만	2	3	-	2	2	6	5	4	2	1
	묘박,계류의 부적절	-	-	2	-	-	-	-	-	-	-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4	5	11	7	6	4	7	8	7	11
	선위확인 소홀	7	4	15	7	5	4	3	4	4	1
	조선부적절	9	16	13	12	18	9	2	-	2	3
	침로의 선정 유지 불량	10	1	4	-	1	3	-	1	1	-
	항해법규 위반	24	21	21	14	3	16	29	20	20	-
	황천대비, 대응불량	7	5	8	4	9	5	7	9	6	2
	기관설비 취급 불량	2	-	4	4	6	7	11	19	8	12
	여객, 화물의 적재불량	4	-	-	1	2	2	2	4	3	2
	출항준비불량	2	2	2	-	-	1	-	1	-	-
	기타	22	6	4	11	16	6	6	5	3	8
	소계	146	100	142	133	119	117	141	150	120	133
취급불 량 및 결함	선체, 기관설비 결함	1	4	3	1	4	2	2	2	-	1
	화기취급 불량, 전선노후, 합선	6	2	1	1	3	14	9	9	5	4
	소계	7	6	4	2	7	16	11	11	5	5
항해 인프라	항해원조시설 등의 부적절	-	-	-	-	-	1	-	-	-	-
	수로조사 불충분	3	2	1	-	-	1	-	-	-	-
	소계	3	2	1	0	0	2	0	0	0	0
환경	기상 등 불가항력	-	1	2	1	1	-	1	3	-	-
기타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1	2	-	-	-	2	4	-	-	-
	승무원 배승 부적절	-	-	-	-	-	-	-	-	-	-
	기타	6	8	8	8	6	2	3	7	12	1
	소계	7	10	8	8	6	4	7	7	12	1
합계		163	119	157	144	133	139	160	171	137	139

주 : 해양사고 원인은 재결서 기준으로 '12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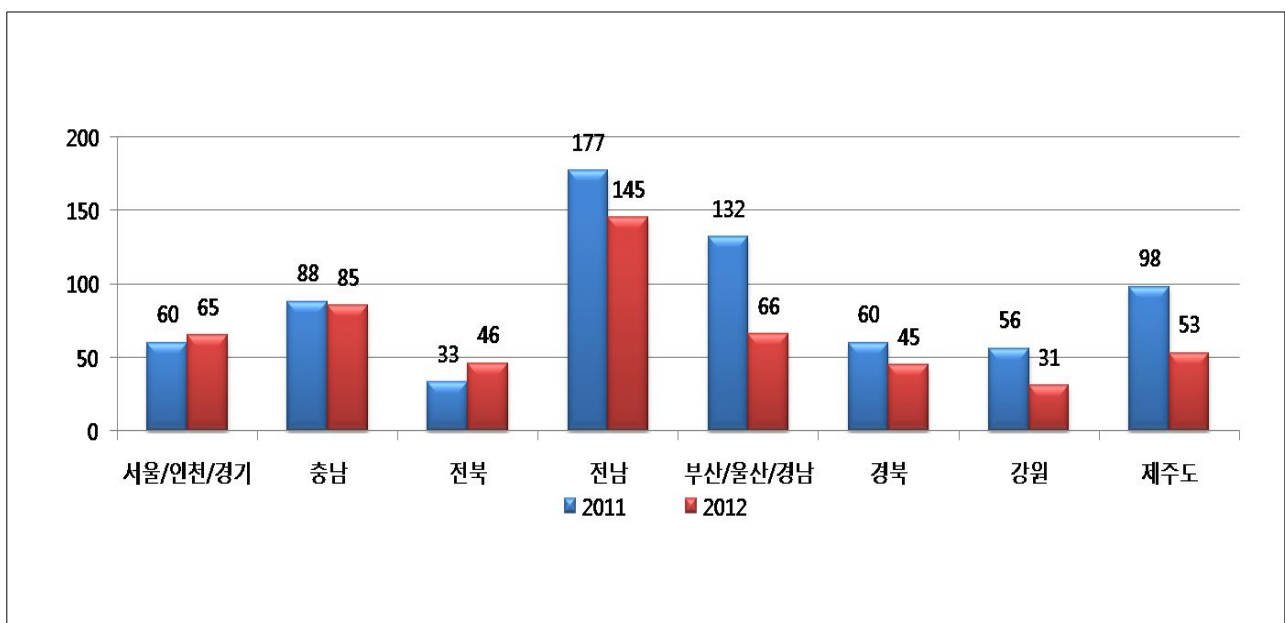
2. 해역별 사고

□ (해역별) '12년 '충남', '전남' 및 '부산·울산·경남'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전체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건수의 55.2% 차지

○ 전년대비 '부산·울산·경남' 해역은 66건, '제주' 해역은 45건 감소

(단위 : 건, %)

지역	'08	'09	'10	'11	'12	합계	5년 평균	비중	전년대비 (증감율)
서울/인천/경기	47	71	44	60	65	287	57.4	(11.6)	5 (8.3)
충남	34	53	46	88	85	306	61.2	(12.4)	△3 (△3.4)
전북	11	6	21	33	46	117	23.4	(4.7)	13 (39.4)
전남	79	71	123	177	145	595	119.0	(24.1)	△32 (△18.1)
부산/울산/경남	83	86	113	132	66	480	96.0	(19.4)	△66 (△50.8)
경북	35	39	28	60	45	207	41.4	(8.4)	△15 (△25.0)
강원	17	28	25	56	31	157	31.4	(6.4)	△25 (△44.6)
제주도	29	72	71	98	53	323	64.6	(13.0)	△45 (△45.9)
합계	335	426	471	704	536	2,472	494.4	(100.0)	△168 (△23.9)





'12년 성과 및 반성

1. 분야별 주요 성과
2. 평가 및 반성



III. '12년 성과 및 반성

1. 분야별 주요 성과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 (직무교육) 현장교육 교재 개발, 해양사고 당사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예인선 항해사 직무교육 도입('12.10)
* 방선·순회·특별교육(연인원 15,988명), 어선원 안전조업교육(5,590명)
- ☐ (승무정원) 200톤 미만·기관출력 750Kw 이상 예인선 항해사 보강(기존 1명 → 2명) 및 내항선 승무정원 점검주기 단축(2년 → 1년)
- ☐ (복지향상) 어선 보험가입 지원, 선상투표제 및 해양사고 국선 심판 변론인 제도 도입 등 선원의 근로환경과 복지향상 방안 시행
- ☐ (전문인력) 인력수요에 맞춰 오션폴리텍을 통해 해기인력 확대 배출(3개 과정, 191명) 및 선박관리·해양교통시설 전문가 양성(129명)

2 선박 안전성 강화

- ☐ (유 조 선) 국토해양부와 화주(4대 정유사) 간 협력 MOU 체결('12.4) 등 내항유조선 안전관리 강화 및 단일선체 유조선 조기 퇴출* 추진
* 당초 목표(15척)를 초과하여 단일선체 유조선(39척) 개조·폐선
- ☐ (검사제도) 내항선 레이더 설치확대(500→300톤 이상), 어선 위치발신 장치 설치 및 노후선박 특별관리 등 설비기준 및 검사 강화
* 레이더, 선교항해당직 경보장치 단계적 의무화,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 ☐ (신조지원) 안전취약 노후선 대체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12년 3.3조원), 노후 연안어선 감축 및 노후기관 교체사업 추진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안 전 도) 취약선박 집중관리*로 아·태, 유럽 지역내 우리나라의 선박 안전관리 수준 우수등급 유지 및 미국내 등급 상향

* 중점관리 대상선박 지정(4회, 403척) 및 미국·유럽 등 기항 전 점검시행(131회)

- (안전진단)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통해 항만개발 단계부터 통항 안전상의 영향 사전 진단('12년 20건) 및 진단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제도개선) 선사의 안전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안전관리체제' 적용 확대* 및 정부의 체계적 선박관리를 위한 이력관리제* 도입 ('12.4)

* 내항 유조선(200 → 100톤 이상), 내항 부선(3천 → 2천톤 이상)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구축

- (항내질서) 교통이 밀집되는 무역항내 순찰선 운영, 전국적 단속·제도 및 관제시설 확충·정밀관제 시행('12년 34개 구역)

- (위해요소) 전국 항만의 선박교통 위해요소 점진적 개선(47건), 안전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 및 항행장애물 처리 지침 마련('12.5)

* 9개 지방청, 총 14개 사업, 123,744백만원 투입

- (체제구축) 첨단 표지시설 신설(52기), eLoran 구축방향 정립 및 해외 전략물자 수송로 운항선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체제 구축('12.10)

- (정보제공) 해도정보 최신화,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및 해양기상 관측망·전용선박 확충 등 해상기상 정보 정밀화 추진

* 수로조사·해도제작 : 18,200백만원, 해상기상 정보 서비스 향상사업 : 9,028백만원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 (협약대응) 선박 설비기준 등 국제해사기구(IMO) 정책제안* 확대
(‘12년 37건) 및 국제협약 가입 로드맵 마련 등 국내산업 발전 도모
*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형식승인, 여성 해기사 해상진출 확대방안 등
- ☐ (해사외교) 양·다자간 협력, 해양사고 공동조사 등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및 개도국·국제기구 지원사업* 실시
* IMO 기술협력기금으로 ’03년~’12년간 약 500만불 지원(연간 약 50만불)
- ☐ (안전문화) 해양안전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122 긴급전화번호
및 등대를 활용한 문화 인프라 확대* 등 해양안전 문화 확산 추진
* 등대박물관 감성체험관 확대, 등대 스토리텔링 콘텐츠, 스마트폰 앱 개발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 ☐ (수색구조) 공기부양정 등 해양수색 구조장비 도입, 민간 구조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도서지역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 함정 47척, 헬기 2대, 병원 1개소 등 응급 의료시스템 구축
- ☐ (위기대응) 해양사고 대응훈련, 풍수해 대비 재난 대응체계 정비
등 위기대응 역량 배양 및 선박·항만 분야 보안관리 강화
* 핵안보 정상회의, 여수엑스포 기간 중 선박 및 항만등급 상향조정
- ☐ (해양방제) 방제자원 관리시스템 개발, 한·중 방제훈련(’12.5), 해안
오염 평가팀 구성 및 방제정(4척) 확충 등 방제역량 강화
- ☐ (해적방지) 선사 대응역량* 제고, 위험해역 운항선박의 24시간 모니
터링 및 UN, IMO 등과 협력을 통한 해적피해 예방
* 해적대응 요령 교육·훈련 교재 제작, 국제해적 정보 전파, 민관군 합동 훈련

2. 평가 및 반성

- 「해사안전법(’11.12 시행)」에 따라 제1차 국가 해사안전기본계획(’12~’16년)과 그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12.5) 최초 수립·시행
 - 안전대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시행을 통해 ’11년 대비 주요사고는 21%, 사망·실종자 수는 25% 저감 달성
- 반면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선박이용자 증가, 해양·항만개발, 해적출몰 등 교통환경은 복잡 다변화하고 안전여건은 악화
 - 특히 선원의 인적과실,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선박 소유자·운영자의 경영문화 등도 여전히 존재, 이에 기인한 사고 계속 발생
-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관심에 비해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해도는 높지 않은 상태로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홍보와 교육도 부족한 실정

◆ 정부 합동의 정책수립 틀이 갖추어진 만큼 해양사고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하여,

-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선원의 인적과실을 방지하고 선박소유자·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 해양안전 문화를 증진시키는데 정부의 역할 증대 필요

IV

'13년도 추진계획

1. '13년 정책목표 및 방향

2. '13년 추진과제

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추진과제 2 선박 안전성 강화

추진과제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과제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추진과제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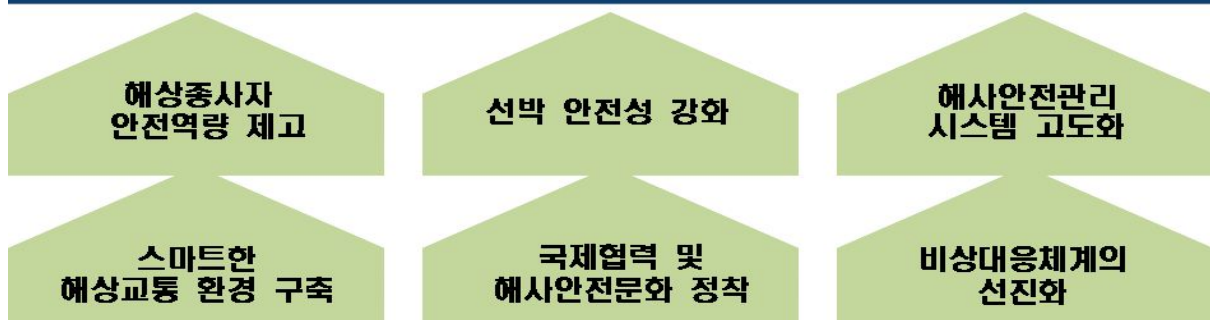
추진과제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IV. '13년도 추진계획

1. 정책목표 및 방향



6 대 추진과제



2. '13년 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중점 1-1 인적과실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내실화

가. 인적과실 저감 정책기반 구축 (국토해양부)

□ 인적과실 저감을 위한 민·관 포럼 운영

- 각 분야별 인적관리 정책 현황, 관련 연구성과의 공유 등을 통해 해상종사자의 인적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학계, 타 교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인적과실 사고의 통계적 분석체계 구축

- 실효성 높은 정책발굴·시행을 위해 해양사고 통계에 인적요인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나. 해상종사자 현장중심 교육 강화 (국토해양부, 농수산부)

□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전 무역항에서 종사자에 대한 순회·방선교육 연중 실시(연인원 12,800명)



-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항만별, 선종별 특성에 맞는 실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항해기기, 기관 등 선박설비 작동요령 및 항법 등 실무위주의 이론교육

- '12년도 해양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취약선박 종사자에 대한 현장 체감형 특별교육 실시

□ 소형 선사 안전관리자, 종사자에 대한 집체교육을 시행하여 실무 지식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 국토해양부 본부 및 지방해양항만청 주관 교육을 연중 개최하여 인적과실 저감의 중요성을 업계에 확산

□ 해사고 학생들의 승선실습을 기존 3학년 학생 약 50%에서 2학년 학생 전원 실습으로 전환하여 실습의 효과 증대



□ 어선사고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합동으로 어선원 인적 과실 예방 교육 방안 마련

* 농수산식품부, 수협, 어선검사기관 및 해양수산연수원 등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 관내 사고분석에 따른 취약선박에 대한 현장 실무교육 실시(연간 220척, 1,300명) - 육·해상 직원 대상 집체 교육실시(34회, 1,500명)
	【 제주해양관리단 】 ○ 예부선·위험물종사자에 대한 집체·방선교육 (연간 300명) 및 간담회(2회) 개최 -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 지원(연간 10회)
인천청	○ 예부선 등 내항취약선박 방선교육(연중) - 선박점검 및 ISM인증심사시 교육병행 ○ 해운선사, 종사자에 대한 운항능력 제고 교육(2회) - 동영상 등 교재개발, 교육 인센티브 개발 추진
여수청	○ 예부선, 유조선 등 선종별 맞춤형 교육(연간 400명) * 해상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마산청	○ 내항 취약선박 직무방선 교육 등 추진(연간 250명) ○ 무역항별(마산, 통영) 순회 교육 실시(연간 2회, 100명) - 항법별 사례 중심의 집체교육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울산청	○ 예부선,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반기별 중점 교육대상 선정, 선종, 직급별 차별화 교육 ○ 선원, 안전관리자 등 종사자 집체교육(2회) * 지자체, 수협, 정유사 등 교육 강사 지원
포항청	○ 예인선, 연안유조선, 20년 이상 내항화물선 종사자에 대한 교재 개발 및 방선교육(연간 970명, 국적외항선 포함) - 항법, 항해장비 작동요령, 연안협수로 통항법 등
평택청	○ 내항선에 대한 방선 및 집체교육(연간 400명) - 高 연령 선원대상 설비 작동법, 선종별 맞춤형 교육 ○ 어민 등 하급면허 종사자 해기능력 강화 교육(200명) - 해기사 면허취득 지원교육, 마리나·어촌계 방문교육
목포청	○ 운항지식 위주의 방선교육 실시(연간 360명) - 최근 해양사고 사례, 서남해 안전항해 안내서 배포 등
군산청	○ 예부선 등 내항 취약선 방선교육 전담반 구성·운영 - 종사자 집체교육(연 2회)
동해청	○ 내항 취약선, 국제여객선 등 외항선 종사자에 대한 현장 방문 교육 실시(연간 65척, 350명) - 관내 무역항 순회 집체교육(2회)
대산청	○ 유조선, 광탄선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연간 300명) - 계절별 관할 항만구역 취약 요인, 사고사례 등
서울시	○ 종사자 등 인명구조안전교육 2회, 선박직원 보수교육 1회
충남도	○ 대산청 집체교육 지원 및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 시행
선박안전 기술공단	○ 선박검사시 현장 안전교육(기술서비스) 실시(27,000명) ○ 어업인 안전조업지도교육(수협주관) 등 강사지원(6,000명)
여수광양 항만공사	○ 계절별 해상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육자료 배포

다. 사고사례 교육자료 개발

□ 2012년 주요사고 사례와 교훈사항 전파를 위한 책자 발간

- 사고유형별 중대 해양사고 사례, 사고 원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사점 등을 알기 쉽게 수록(500부)

라. 해양사고 관련자 징계 집행유예 직무교육 시행

☐ 해양사고에 따른 징계 집행유예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 위탁·운영 (해양수산연수원)

○ 실효적 사고 재발방지와 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점진적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세분화*

* 선박운항사고 예방교육과정(충돌, 접촉, 좌초 등), 선박 재해사고 예방교육 과정(화재, 기관손상 등)

마. 주요 사고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어선원에 전파 (농수산부)

☐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안전예보(12회) 및 수시특보(2회)를 회원 조합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전파

☐ 수협 발행 연근해 조업정보지를 통하여 최신 해양사고 사례, 교훈 등을 어업인에게 전파

* 매월 2회(13,000부) 우편으로 배포

중점 1-2 중·소형 선박 해기사 운항능력 제고

가. 6급 항해사 등 면허취득 교육 강화

- 6급 항해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면허취득교육 과정에 선박 조종시뮬레이션 실습 의무화



- 연안 시뮬레이터 1기 추가 설치(1,119 백만원) 및 6급 항해사 면허취득교육에 시뮬레이션 교과목 추가

나. 예인선 신규 항해사에 대한 운항교육 시행

- 예인선 항해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예인선 직무교육에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과정 추가
- 예인선 직무교육 과정 및 현직 종사자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시행(해양수산연수원)

중점 1-3 예인선·위험물 운송선박의 최저승무기준 현실화

- 연안수역 화물운송용 예인선(98척)*의 승무기준 개선에 따른 선사의 이행여부 확인(연중)
 - 기관사 2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연안수역 화물운송용 예인선(98척)*의 승무기준 개선(항해사 1인, 기관사 2인 → 항해사 2인, 기관사 1인) 현황 등
- * 200톤 미만, 기관출력 750Kw 이상인 경우 선장, 기관장 및 1등 기관사 승선

중점 1-4 우수 선원 고용여건 개선

- 해사고 졸업생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특례 정원 확보로 대형 해운선사 취업 유도

중점 1-5 선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가. 중장기 선원인력 수급 및 선원복지 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선원인력 양성체계 마련을 위하여 “선원인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추진('13.3)

□ 「2006 해사노동협약*」 및 「선원법」에 따라 선원복지에 관한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협약발효시기/적용대상 : '13.8.20 예정 /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

○ 중장기 선원수급전망, 선원 근로여건 개선, '선원근로자 퇴직금공제 제도*' 도입 및 '선원복지고용센터' 기능 확대 등 방안 마련

* 여러선박을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선원은 퇴직금 수급이 어려워 생계불안정 및 선원직 기피사유로 작용, 1년이상 공제부금 적립시 퇴직금 지급 추진

나. 해사노동인증제도 시행

□ 국적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제도 실시

○ 국적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이행을 위해 전문인력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대행기관 지정·위탁 추진

□ 외국적선박에 대한 선원 근로·생활기준 등 항만국통제 시행

○ 선원근로관련 제도·법령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 해사노동협약 이행여부 점검

○ 해사노동인증검사관에 대해 '13년 상반기 중 선원법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 및 현장 실습 추진

- 원활한 점검업무를 위해 '해사노동인증제도 매뉴얼' 작성 추진

다. 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한 선원 근로환경 개선

- 기존 선원 구직·구인등록, 취업모집 알선 업무에서 범위를 넓혀 선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사업 실시(선원복지고용센터)
 - 육상직업전환 프로그램 이수 지원, 교육생의 취업 정보 제공 기능 및 컨설팅 기능 강화

라. 선원 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 삼천포항 선원복지회관 준공(사업비 860백만원, 연면적 400㎡), 비응항 선원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907백만원, 연면적 600㎡) 추진



* '13년도 예산 : 삼천포항 준공 사업비 819백만원, 비응항 설계비 70백만원

- 선원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활성화('13년 47억)
 - 선원 자녀 장학금·결혼예식비 지원, 맞춤형 복지비 지원, 무료 법률구조사업 등 선원복지사업 지속 시행

마. 5톤 미만 어선 승선 어선원 보험가입 지원 (농수산부, 지자체)

-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수협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농수산부 지원액 : 56,783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 3,278백만원(인천시 180, 경기도 111, 경남도 400, 경북도 667, 울산시 53, 부산시 258, 강원도 460, 전남도 400, 전북도 318, 제주도 431)

바. 선원 비과세 확대

- 외항 선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200 → 300만원) 추진

-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근로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후 반영('13. 상반기)

사. 과로 시 항해당직 수행 금지 추진

- 과로·질병 등으로 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항해당직·선내작업을 회피할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
- 선원 피로도 측정·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상근무자 피로도 측정('13 하반기) 및 제도 도입 타당성 등

* 피로도와 해양사고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12. 중해심) 연계 추진

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운영

- 해양안전 심판에 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 해양안전심판 변론인 지원

*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 등록된 해양안전심판 변론인(전체 349명) 중 국선심판을 위해 변론인 정보를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개('13.2)

중점 1-6 외국인 선원의 근로 여건 향상

가. 제3국의 선원공급원 구축방안 마련

- ☐ 무상원조 등을 활용하여 캄보디아, 미얀마 등 해외신규 선원인력 공급원 확대 구축
 - 해외선원확보 분야 무상원조 재원조달 방안 수립, 해외인력의 국내 선박 취업지원을 위한 로드맵 개발
 - 기존 송출국가 공급규모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타당성 검토

나. 중소선사 공동 해외 선원인력 양성 및 교육

- ☐ 내항선에 원활한 외국인선원 고용을 위해 선주협회, 해운조합 및 수협 등과 공동으로 투자재원(현지 교육시설, 강사료 등) 확보 추진
 - 국적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자료 배포와 선종별 교육 강화

다. 외국인 선원 권익보호 및 안전교육 시행

- ☐ 외국인 선원관리지침 보완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방안 추진
- ☐ 외국인 선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입국 전·후 양국 선원 교육기관에서 직무 교육실시
 - 입국 전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입국 후 국내 선원교육 기관에서 3일 이내 직무교육 집중 실시

* 선박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

라. 외국인 선원 콜 센터 운영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폭력 등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선원 콜 센터' 운영

○ 장기적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문화체험·교육·통역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 선원지원 센터』 설립을 추진

* 육상 외국인근로자는 전국 8개의 외국인지원센터 설립·운영 중

중점 1-7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가. 어선원 안전교육의 내실화 추진

□ 체험·참여형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조기정착 유도

- '13년도 이후 어업인 교육은 수협중앙회 주관의 체험·참여형 교육으로 일원화(선주간담회는 폐지)
- 어선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에 맞게 교육내용 세분화 및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2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어촌계·협회 등을 직접 방문하는 소규모(50명 내외) 순회교육 확대

* 교육계획 : 41,466명(기관 위탁 3,567명, 강사 순회교육 71개 조합, 37,899명)

□ 수협, 지자체 합동으로 어업인에 대한 안전조업 및 해상안전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지방해양항만청은 교육 강사 등 지원

- 매월 1일 '어선 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어업인 대상 캠페인 실시
- 항해장비, 기관 등 주요설비 자체점검 생활화, 조업중 추락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구명동의 착용 홍보 등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시	○ 안전조업 지도 및 해상안전, 안보교육 실시(1,000명) ○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전개, 구명동의 착용 계도
강원도	○ 선주, 선장, 기관장 등 간부 선원에 대한 어업인 교육 및 구명동의·구명사다리 보급 사업 추진
경기도	○ 5개 연안 시·군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지도교육(560명) ○ 주요 항포구에서 매월 1일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 선상 추락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구명동의 착용계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경남도	○ 7개 연안시군 어업인 대상 안전지도 및 해상안전 교육 ○ 어선 안전의 날 가두 캠페인, 계절별 선박피해 예방교육 실시
전남도	○ 16개 시·군 어업인 대상 집합교육 및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제주도	○ 6개 수협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지도 및 안전교육(2,000명) ○ 어선 안전의 날 가두 캠페인 및 구명동의 착용제도

나. 5톤 미만 어선원 대상 기본항법 등 교육 (선박안전기술공단)

- ☐ 어선 검사시 동력장치를 갖춘 5톤 미만 어선원을 대상(59,328척)으로 기본항법 등 기초교육 실시
- ☐ 사고 다발해역의 항·포구를 선정하여 연 2회 교육 실시(연간 192회) 및 ‘어선 안전의 날’ 행사 지원

다.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

- ☐ 언어·문화적 차이에 따른 항해안전 위해요소 제거
 - 승선 예정 선종에 대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문화교육 강화
- * 교육프로그램 개선(한국해양연수원 및 수협 등)

라. 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관리 강화

- ☐ 자격미달 외국인 선원의 국내 고용 예방을 위한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능력제고(지자체 및 수협)
 - 관리업체의 전담통역·관리 인원에 따라 외국인 선원관리 인원 조정 검토

* 외국인선원 50-100명인 경우 외국어전담자 1명 배치 등

중점 1-8 해사 전문인력 양성

가. 우수 고급 해기사 양성 확대

- ☐ 해운업계의 요구와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해 고급해기사 양성 추진



* 해운업계 해기인력 탄력적 양성·공급을 위한 국비 지원과정

< '13년 양성 계획 >

구 분	외항상선 3급	원양어선 3급	내항상선 5급
교육인원	200명 (항해 100명/기관 100명)	40명 (어업 20명/기관 20명)	40명 (항해 20명/기관 20명)
교육기간	9개월 3.4 ~ 11.29 (육상 6월+승선실습 3월)	7개월 2.1 ~ 8.30 (육상 6월+승선실습 1월)	5개월 8.2 ~ 12.30 (육상4월+승선실습1월)
수료 후 특전	교육과정 수료(이론교육 6월) 및 승선실습기간 1년 충족 후 해당면허 취득		교육과정 수료 후 해당면허 즉시 취득
협력기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 ☐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정원 증원 및 단기과정 개설 검토

- 한국·목포해양대학교 승선학과의 정원을 확대하고 단기과정을 개설·양성하여 부족한 해기사 충원 모색

* 향후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정원 증원) 및 국방부(병역특례 대상자 증원)와 협의 및 단기과정 개설을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필요

나. 새로운 운항시스템 및 운항기술을 습득한 해기사 양성

- ☐ 북극해 항로 개발 등에 대비하여 선박 운항에 필요한 '극지운항 기술교육 과정' 개발 추진

- ☐ 국제항해 선박 종사자의 대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교육과정' 개발 추진

다.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개정을 통한 연수원 기능 확대, 직원보강 및 교육 시설 확충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능을 확대(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통한 장기 승선 유도 등)하고, 직원을 보강('13년 3명)
 - 노후실습선(한반도호) 대체를 위한 실습선 신조 예산 확보 추진 및 연안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구입·설치(구입예산 11억원 확보)
 - 부산·인천 해사고등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및 실습효과 증대
 - 해사고의 관할권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부로 이관, 교육시설 개선 등을 통해 '마이스터고'의 교육역량 강화 추진
-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정 : '13년 상반기
- 마이스터고 운영비 증액, 실습관 증축 등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마이스터고' 정착 지원 및 실습교육의 내실화 도모

라.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및 해외진출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단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기본방향 및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해외시장 개척 등
- 선박관리 산업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한 국내 선박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330명 교육 목표)
 - 교육과정 : 양성과정 180명, 심화과정 150명

○ 교육기간 : 2013. 3월 ~6월 / 9월 ~11월(상하반기 각 1회)

○ 교육기관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실시

□ 선박관리업의 해외 진출 모색을 위한 해외 로드쇼 추진(일본)

마. 해양교통·위성항법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첨단 전자항법기술 도입 및 GNSS 다원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 운영

* 지원분야 : 해양교통(한국해대, 목포해대), 위성항법(항공대, 인하대)

○ '13년도 4개 대학원 과정 관리운영비, 신입생 장학금(40명) 등 정부 지원 추진(500백만원)

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 에너지자원 개발의 심해 확대 등에 따른 해양플랜트 수요 증가로 관련 서비스산업* 시장도 지속 성장될 전망

* 우리나라는 해양플랜트의 건조는 세계 1위이나, 서비스 분야(건조 이후 운송, 설치, 관리 등)의 시장진출은 미진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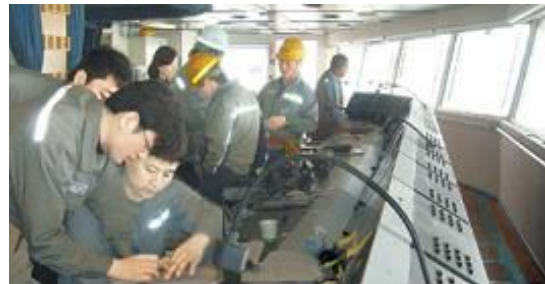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교육·양성과정 확대 및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 추진('13년 2억원)

일반 1-1 시운전 선박 승무자격 신설 및 어선원 승무기준 개편

가. 시운전 선박의 항해사 승무자격 신설

-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개조되어 시운전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운전 선박 항해사의 승무자격 법제화 추진
- 시운전 기간, 시운전하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른 승무기준 마련 (승무정원 기준 신설시 시운전 승무경력 인정 검토)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나. 어선원 승무기준의 국제화 추진

- 어선 승무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협약) 발효에 대비한 국내 어선원 승무기준 개편

* 미 수용시 원양어선의 조업차질 예상(1,930억/년)

-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체계 및 당직근무의 기준을 국제협약 체계에 맞도록 「선박직원법」 개정 추진

일반 1-2 수면비행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 교육체계 확립

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교육과정 개발

□ 수면비행선박의 조종사 양성을 위한 모의 조종훈련 과정 개발

- 제조사의 실선 개발 일정에 맞춰 조종시뮬레이터 등 모의 조종 훈련을 위한 교육장비 개발
- 모의 조종훈련 교육과정 및 표면효과 전용선 운항관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위그선 실선운항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수면비행선박 개념도 >



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제도 개선 (해경청)

□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방식의 다양화* 조치('12년)에 따라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 (기존) 필기시험 후 면허취득 → (개선후) 교육기관 연수 시 면허발급

- 교육기관(대한요트협회, 수상레저안전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면허증 발급절차 마련 등

중점 2-1 중·소형 유조선 안전 제고

가. 화주와 선사 간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유도

- 내항 유조선 폭발·화재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정부-4대 정유사, '12.4.2)의 이행상태 주기적 확인

* SK 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 선·화주 간 선박 안전관리 노하우를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분기별)

* 휘발유 등 고위험 화물 양하 후 화물창 세정시간, 선원 휴식시간 부여 등

나. 내항 유조선의 자율적 이중선체화 유도

- 화주(정유사)의 안전규정 개정을 통해 단일선체 유조선(108척)의 10%를 이중선체로 개조 또는 감축 추진

- 정유사 자체 기준 개정 현황, 이중선체 개조 실적 및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현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매분기)

- 6백~5천톤 미만 경질유 운송 단일선체 내항 유조선에 대한 강제 퇴출 기준 검토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중점 2-2 **내항선 · 어선에 안전관련 항해장비 설치 확대**

가. 내항 여객선 · 화물선에 대한 항해장비 설치 확대

- ☐ 내항선의 항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레이더 설치 의무화 대상 선박 확대(현행 300 → 향후 100톤 이상)

* '13.1.1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에 설치여부 확인

- ☐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 확대를 위해 저가형 AIS 개발('13.8) 및 설치대상 확대(현행 50 → 향후 20톤 이상)

* 「선박설비기준」 개정('13.10)



- ☐ 선박검사 시 항해장비의 기능을 상시 점검하고 노후장비 정비 및 필요시 교체 추진(연중)

나. 어선에 위치 발신장치 확대 및 사용법 교육 강화

- ☐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 위치 발신장치' 무상보급 추진

* 어선법 제5조의2 의거, '어선 위치 발신장치' 장착 의무화

- 7만 3천여척 어선을 대상으로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어선 위치 발신장치' 설치 예정 (해경청)

계	'11-12년	'13년	'14년	'15년
73,522척	9,647척	20,273척	22,574척	21,028척

- ☐ 블루웨이브 서비스*(수협)시 무선설비 사용법 교육 병행 (농수산부)

* 어업인 무선교신 가입 등 수협중앙회의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 어업 현장방문, 어업정보 통신국 체험행사 및 견학행사 134회 (10,000여명) 실시

중점 2-3 소형선용 통합 항해장비 개발

- 육·해상 간 쌍방향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선박용 해양안전 통합 단말기 및 관련기술 개발 추진(~14년, 1,800백만원)

< 기술개발 내용 >

최종 목표물	주요 기능
소형 선박용 해양안전단말기	AIS 정보 송수신, 내비게이션 기능, 해양안전 정보 표출(TXT, 알람, 전자해도)
쌍방향 지능형 해양안전정보 융합 단말기	AIS, Radar 정보통합, 충돌위험도 평가기능 통합, 해양안전정보 중계, 쌍방향 정보교환 체계
선박 충돌위험도 식별시스템	AIS 정보기반 인근해역 선박간 충돌위험도 평가 및 경고, 스마트 PC용 프로그램 개발

중점 2-4 체계적 해양안전 기술개발 추진

가. 해양안전 기술개발 과제 지속 발굴·추진

□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해양안전기술 산업의 육성과 국제기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 기술개발의 부수적 성과로 '13년 중 국제회의 의제개발(11건), 특허 출원·등록(10건), 논문게재(30건) 추진

< 연구과제 목록 >

분야명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백만원)
해양안전 기술개발 (3건, 2,503)	해양안전실현을 위한 차세대 VTS 기술개발	'10.5~'16.4	11,100
	지능형 해양사고 예방 및 구난기술 개발	'08.9~'14.8	6,600
	IMO 선박안전 및 환경규제 대응정책연구	'11.12~'16.8	500
녹색선박 기술개발 (7건, 4,100)	녹색선박 TCS 시스템 구축	'11.10~'16.8	22,000
	선박배출 대기오염원(PM, BC)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12.11~'17.8	10,000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장치 개발	'09.1~'15.8	2,950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해상운송 기술 개발	'11.9~'16.8	1,000
	USCG기준 부합 BWTS 핵심기술개발 및 시험·인증인프라 구축	'13~'17	12,000
	상시공모과제(국제협약대응분야) (1) 다관절 파공봉쇄장치 개발 (2) DGNSS, eLoran, 항로표지 인프라 성능 개량과 활용기술개발	'12 ~ 계속 '12.6~'15.5	-
해상교통 기반시설 기술개발 (5건, 3,600)	DGNSS 보정서비스 신뢰성 기술개발	'11.8~'13.8	800
	광역보정시스템(WADGPS) 구축 기술개발	'10.10~'14.9	3,750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기술개발	'11.12~'14.12	2,200
	DGNSS 서비스 성능강화 및 항만 PNT 모니터링 기술	'12~'15	2,300
	DGNSS 응용기술개발 기획연구	'12	50

- 고속여객선 충돌회피를 위한 3D Echo-sounder, 지상파 DMB를 활용한 DGPS 위치정보 제공 기술 등 개발기술* 상용화 추진

* 간이 피로도 측정 어플, 선박평형수 유해생물 검출 Kit, 선박평형수 처리 모니터링 장치 및 배광 측정장치 등

- 국제해사기구(IMO)의 NOx 실시간 모니터링, 독성 화물잔류물 해양투기 금지('13.1) 및 분뇨배출 규제강화에 대응하여

- NOx 제한치 연속계측 장비, 독성 고체화물 잔류물 육상수용 시설 및 분뇨오염방지설비 개발 추진

- 북극해 항로 선박 운항을 위한 극지항로 운항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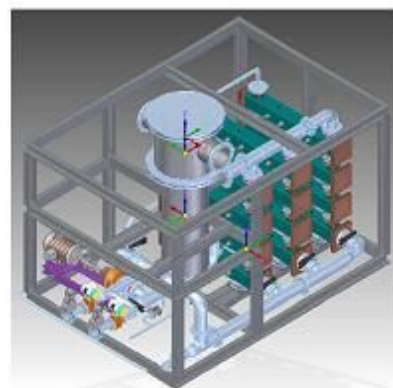
*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기법(10,000백만원)

나.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개발

- 現 국제해사기구(IMO) 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개발 착수('19년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 60조원 예상)

* 형식승인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공동으로 기술개발 추진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예)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선박평형수 생물시험을 위한 국제 시험 인증센터*로 육성

* 미국의 강화된 생물시험 기준을 시험·인증하는 기관으로 육성

다. 선박 온실가스 저감 대응

- ☐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을 위한 녹색선박 기술개발 사업 추진('13.1~)
- ☐ 연안해운 선사의 온실가스 저감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 개발·보급('13.12)
- ☐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시스템 구축 등 내항해운 온실가스 저감 방안 연구 추진('13.9~)

라. 블루 네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추진

- ☐ 선박 안전항행 유도를 위해 이용자에게 항로, 항로표지시설 등의 항해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망 구축
 - 항로표지시설, 위험시설, 수심, 조석 및 해류 정보 등을 항해자에게 음성으로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연구 추진('13.1~'14.12)

마.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

- ☐ '14년 예산확보, 사업 시행계획 수립, 대형 R&D 과제기획 및 연구 과제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정기·임시회의 개최

* 연구과제 별 연구달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중점 2-5 수면비행선박 안전운항 대책 마련

가. 수면비행선박(WIG) 관련 국내외 규정 개정

- ☐ 항공기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요건 마련 및 시운전을 하는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의무화(「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수면비행선박의 특성을 반영한 임시항해검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개정 추진
- ☐ 국제해사기구(IMO)의 수면비행선박 잠정지침 개정 추진
 - 국내 수면비행선박 제조경험 등을 토대로 IMO 잠정 기준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안전 운항 가이드라인’ 검토·논의(‘13.2)
 - * ’10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에서 논의토록 승인
- ☐ 수면비행선박 상용화 일정에 맞춰 항로·항내 운항속도 지정, 시험 운항 등 수면비행선박 특성에 맞는 관제 매뉴얼 마련

나. 수면비행선박 안전운항 대책 마련

- ☐ 제조사의 시험 운항 전 선박 자체, 운항해역의 교통 안전성 검증을 위한 민·관 합동 TF 개최 및 안전대책 마련
 - 충분한 시험운항을 통해 수면비행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
- ☐ 내항여객 운송에 대비, 운항관리규정 개발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해운조합, 해경청)

중점 2-6 노후 선박의 안전검사 강화

가. 선령 20년 이상 내항선 및 노후 어선 검사강화

- ☐ 노후 내항선에 대한 '선박 무료 특진서비스' 실시
 - 선박 검사시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선체 두께 측측 등 사고 취약부분에 대한 특진 서비스 및 해양사고 사례 홍보 병행 실시
- ☐ 외국에서 도입되는 여객선에 대한 해상 시운전 검사 강화
 - 외국 도입선에 대한 속력·조타 시험에 추가하여 후진·기관의 작동 시험 등 검사항목 확대·개선 추진('13.3)
- ☐ 노후선박의 기관 성능시험 시 윤활유 성능분석 병행
 - 동점도 측정·성분 분석 Test Kit('13.6 구매예정)를 통해 노후선에 대한 윤활유 성능분석 후 선박에 자료 제공 및 자가 정비 유도

나. 길이 24미터 이상, 선령 30년 이상 내항화물선 검사 강화

- ☐ 노후선에 대한 숙련검사원 배치·검사원 수 증강 및 내시경, UT 장비 등 최신 검사기구·기법에 의한 안전 취약요소 정밀검사 시행
- ☐ 노후선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박검사원의 'My Ship 제도' 추진
 - 선박별 검사원 지정('13.5) 및 취약선박 관리를 위한 사고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검사원 자질 및 역량 강화

☐ 검사규정 적용 오류 방지를 위한 검사원 법령 숙지도 평가('13. 7)

☐ 교육·훈련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검사원 역량 향상

○ 검사원의 직렬·경력별, 선종별로 직무교육 프로그램 세분화 및 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선종별 검사 가이드북 제작·보급('13.10)

○ 직무수행의 전문화 증진을 위해 세계해사대학 유학, 트라이볼로지 교육* 등 위탁교육 강화

* 트라이볼로지 : 마찰·마모·윤활에 관한 학문 분야

○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ISO 50001 교육 등 실시

라. 검사장비 최신화

☐ 최신 검사장비의 도입을 통한 선박의 검사 신뢰도 및 효율성 확보

○ 내시경 검사장비 구입 등 검사기구 확충·최신화 및 검사원에 대한 내시경 검사 장비 활용방법 및 판독요령 등 교육 추진('13.6)

마. 어선 안전검사 기준 강화

☐ 소형 어선에 대한 수밀격벽 설치기준 강화('13.3)

○ 총톤수 5톤 미만에도 어선의 상갑판 하 선원실과 기관실이 설치된 경우 수밀격벽을 설치토록 구조기준 강화(어선법)

☐ 화재사고 취약어선에 대한 검사 강화

○ 어선 검사 시 전기설비에 대한 집중점검 서비스 실시

바. 노후기관 교체 및 노후어선 감척 (농수산부, 지자체)

□ 어선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기관·개량 지원 확대

○ 어선의 노후 기관 및 부속 설비 대체 자금지원

* 전체 사업척수 : '12년 473척 → '13년 556척

< '13년 지자체별 사업내용 >

시군별	사업량 (척)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부산	47	936,666	281,000	281,000	374,666	
인천	33	656,666	197,000	197,000	262,666	
울산	21	420,000	126,000	126,000	168,000	
경기	28	563,333	169,000	169,000	225,333	
강원	44	893,333	268,000	268,000	357,333	
충남	47	933,333	280,000	280,000	373,333	
전북	48	953,333	286,000	286,000	381,333	
전남	133	2,653,333	796,000	796,000	1,061,333	
경북	47	943,333	283,000	283,000	377,333	
경남	55	1,106,666	332,000	332,000	442,666	
제주	53	1,066,666	320,000	320,000	426,666	
합계	556	11,126,662	3,338,000	3,338,000	4,450,662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시 노후어선 우선 감척 추진

< '13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

시군별	사업량 (척)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부산	60	2,460,000	1,968,000	492,000	
울산	3	122,500	98,000	24,500	
강원	17	697,500	558,000	139,500	
충남	92	3,772,000	3,018,000	754,000	
전남	128	5,247,500	4,198,000	1,049,500	
경북	51	2,091,250	1,673,000	418,250	
경남	146	5,986,250	4,789,000	1,197,250	
제주	23	942,500	754,000	188,500	
합계	520	21,319,500	17,056,000	4,263,500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중점 2-7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가. 선박검사제도의 선진화 · 국제화 추진

-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13.3)
 - 형식승인 증서의 적정 유효기간 지정 및 우수 제조 사업장에서 발행한 합격증서의 검사기관 배서 제도 도입 등
 - 주요 해운국과의 선박용 물건 상호인정협정 대응방안 마련('13.10)
- 레저선박 우수제조사업장 설비 · 시험요건 개선, 팽창식 구조정의 우수정비 사업장 대상추가 검토

나. 선박검사 관련 산업 육성 · 지원 추진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해외 기술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해외 법인 (중국) 설립 검토('13.3)
- 국적선에 대한 선박 검사권의 대외 개방검토, 이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 및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13.5)

< 선박검사 >



다. 예인선의 예인장비 안전성 제고

- 야간 항해시 예부선 충돌사고 저감을 위한 예인줄 기준 개선
 - 형광도료·반사판 등을 이용하여 야간 식별성이 강화된 예인줄 개발 및 이용 의무화 방안 검토

라. 정부권한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관리 강화

-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정부업무 대행기관에 대해 위임사항의 적정 수행여부 평가 및 미비점 보완(13.6)

중점 2-8 안전취약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건조 자금 지원

가. 대형 외항선의 신조를 위한 금융기반 강화

□ 수출기반보험(무역보험공사), 그린쉽(정책금융공사), 중고선 매입자금 지원(輸銀) 등 해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계속)

- 자금 조달의 용이성 증진을 위해 시장을 통한 선박펀드 활성화와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 선박투자회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13.12)

□ 해운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선박 적기 확보지원을 위해 해운에 특화되어 공적 보증기능을 담당할 별도 기금 설립 추진

- 「(가칭) 해운보증기금법」 제정안 마련('13.6), 단계별 기금 설립 및 운영 전략 수립('13.12)

□ 선진 선박금융기법 전수와 해운·금융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속 추진

나. 내항선박의 신조자금 지원체제 구축

□ 내항선사에 선박 건조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방안 시행

- 시중 대출금리와 정부 정책금리간 차액을 지원하는 연안 선박 현대화자금 이차보전 ('13년 예산 4.5억 확보)

- 국토해양부-해운조합, 국토해양부-금융기관 간 이차보전사업 업무 협약 체결('13.1)

* (일정) 이차보전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13.2) → 사업자 선정('13.3) → 신조 자금 융자('13.4) 및 이차보전금 지급('13.5)

일반 2-1 내항 취역선 현장 안전점검 강화

가. 내항화물선 안전 전담반 운영

□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내항화물선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 및 입출항하는 내항 취역선에 대한 안전점검 집중 실시

* 필요시 검사대행기관(KST, KR)과 합동점검 실시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 선박설비 작동법, 승무정원 적정성 등 점검 【 제주해양관리단 】 ○ 감굴운반선, 모래운반선 및 내항화물선 취역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인천청	○ 분기별 중점 점검사항 지정 운영, 선원의 비상대응능력 및 자체 선원교육 실시여부 등 확인
여수청	○ 해양사고 고위험군인 예인선, 노후화물선 집중점검 ○ 유조선 작업절차 준수여부 점검 등
마산청	○ 집중점검 주간 및 선종별 집중점검 항목 설정·운영
동해청	○ 선박검사기관과 예부선 2+2 운동 전개
군산청	○ 유조선, 예부선 등 선종 및 운항환경에 따른 점검항목 설정 및 점검 시행
목포청	○ 예인선, 연안유조선, 내항화물선에 대해 선박운영 및 설비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 시행
포항청	○ 최소승무정원 승선, 비상대응훈련 등 집중 점검
평택청	○ 연안화물선, 항내 공사작업선, 역무선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현장점검 시 선원 안전교육 실시
울산청	○ 점검순위 차별화 및 My company 제도운동을 통한 집중관리
대산청	○ 내항유조선 등 상시방선을 통해 위해요소 제거

나.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내항선 사고 방지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인력 확보 및 배치

일반 2-2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대응 및 차세대 선박운송 기술 개발**

가. **GBS** 기능요건을 반영한 단일 공통구조규칙 소프트웨어 개발

☐ GBS 기능요건을 반영한 선급 규칙 개발 추진

- 한국선급의 GBS 선급규칙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년 2회)
- IMO에 한국선급 선급규칙의 GBS 검증 신청(~'13.12)

* '14년부터 실시하는 IMO 전문가 그룹의 적합성 검증 사전 준비

나. **NGH**(Natural Gas Hydrate) 운송선박의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유사선종 및 경쟁국 설계(안)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NGH* 운송선박과 관련 시스템의 위험도 평가 추진

*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 : LNG를 고압·저온(-15℃)에서 물과 결합해 팽릿한 차세대 연료(NGH 1cc는 170cc의 천연가스 방출)

☐ 효과적인 NGH 고착과 해리를 위한 연구 진행 및 화물창 시스템의 최적(안) 산정

다. **LNG** 연료 추진선박 출현에 대응한 검사기준 마련

☐ LNG 연료 추진선박의 안전한 건조를 위해 「(가칭) 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준」 제정('13.1)

* 유럽에서는 '13.1월 5만 7천톤급 카페리여객선 취항예정이며, 국내에서는 IPA에서 2월말 경 200톤급 항만홍보선 취항예정임

일반 2-3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가.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운영 내실화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 항만으로 반입되는 포장 위험물에 대한 CIP 근거 등

< 위험물컨테이너 사고 사례 >



- CIP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국적 및 외국적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정비
-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 지방해양항만청 선박 검사관 워크숍 개최(13.9) 및 '수입위험물 컨테이너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추진

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정비

- 위험물검사 대행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제36차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개정·보완 추진
 - 연료전지, 초저온용기, 금속 수소화물 등 취급 안전관리 강화

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선

☐ 제36차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사항 국내법 수용

- 연성형 산적컨테이너(Flexible bulk container, BK3)의 설계, 구조, 검사, 시험규정 신설 및 크릴밀 등 신종 화물을 위험물로 추가

일반 2-4 소형어선의 생존성 강화

가. 개량형 구명동의(Life-jacket) 보급 · 확대

☐ 상시착용 구명동의(개량형 팽창식) 보급 (농수산부)

* '13년 5,000벌 (국비 5억원)

☐ 개량형 구명동을 소형내항선으로 확대 추진

- 착용이 간편한 구명동을 내항 여객선, 예부선 등에서 구입토록 권고하고 상시착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실시

나. 구명뗏목 사후관리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 검사시 구명뗏목의 비치상태 점검 및 구명뗏목 사용방법의 현장교육 시행

다. 기상악화 대비 사고예방 지원 (인천시, 강원도)

☐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선박 파손예방을 위한 선박 인양기 설치

* 인천시 360백만원 / 강원도 200백만원

일반 2-5 여객 이용시설 등에 노약자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강화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국고 여객선 건조 시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토록 지침 시달 및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편의시설 설치 권고

중점 3-1 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

가. 내항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강화

- 내항선사 최고경영자의 경영 방침,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심층 심사를 실시하고

- 대행업체 심사시 선주, 선원, 선박관리 회사 담당자 입회 의무화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항선에 대한 내부 심사·부적합사항 보고 면제 및 서류작업 간소화 추진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주기적인 자사선박 방선 및 선상 안전관리 매뉴얼의 체크리스트 化를 위해 제도 개선

☐ 소형 선사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여 자체 안전관리 기법 향상 도모

*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등 협조

☐ 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 적용 항목 간소화 법적근거 마련(「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

* 총톤수 2천톤 이상의 부선 등 내항 예부선은 안전관리체제(총 11개 항목으로 구성) 중 일부 항목만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는 미약

□ 육·해상 종사자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종사자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인증심사 시 교육 비중을 상향 조정
- 안전관리체제 우수 운영 사례, 내항선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소책자 사례집 발간('13년 상반기)

나. 인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제(ISM) 개선

□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ISM 개선을 위한 민·학·관 추진단(가칭 '스마트 ISM 추진단') 운영('13.2)

- 예부선 S-5, 의사소통 3통 운동 확대 및 소속선박의 운항상태 수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선사 사무환경 개선 유도
- ISM 개선사항을 심사에 반영하여 일선 현장에 조기 정착토록 추진

다. 사고선사와 선박 특별심사 실시

□ 유사사고 예방 및 선사(육상)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주요사고를 유발한 선사·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제 이행실태 심사 시행

- 지방청 심사관간 심사결과 공유 및 업계 전파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 해양사고 발생, 외국 항만에서 출항 정지된 선박·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 및 중부적합 사항 식별시 특별(수시)심사 추진
	【 제주해양관리단 】 ○ 해양사고 규모, 피해정도 등에 따라 수시인증심사 실시 - 제주단 등록 외항선은 타 지방청과 협조체제 구축·관리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청	○ 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사고 발생 여부 수시 정보 교류 ○ 선종별 승선 및 심사 경력을 고려하여 특별심사팀 구성 ○ 사업장에 대한 특별심사 후 필요시 선박에 대한 특별심사 실시
여수청	○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해양사고 발생 선박·선사는 경중을 고려하여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증서 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마산청	○ 사고선사와 선박에 대해 100% 수시인증심사 추진 - 사고 대응조치의 적절성 여부 검증을 통해 비상대응능력 향상 - 사고다발선사는 중간 인증심사 전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 ○ 초임 심사관 역량 강화 자체 교육 추진
동해청	○ 사고 발생 선사·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실효성 특별심사 - 사고재발방지 대책 마련여부 등 중점 점검 ○ 해양사고 예방관련 사업자 간담회 분기별 개최
군산청	○ 사고선박 인지 시 조속한 시일 내 특별점검 시행 ○ 사고선박 선사의 선단이 군산·장항 입항시 특별점검 실시
목포청	○ 사고선사 특별심사시 선사의 해양사고 재발 대책 확인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실효성 점검 및 선원 교육 병행
포항청	○ 관할해역내 충돌 등 사고 발생 선박 및 사업장 특별심사
평택청	○ 사고원인 관련 안전관리체제 취약요소 적극 발굴 및 매뉴얼 반영 ○ 주요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제 수립여부 및 능력 검증
울산청	○ 사고원인,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도 ○ 특별심사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개선활동 이행여부 지속 확인
대산청	○ 사고발생 선박 및 선사 안전관리체제 실효성 점검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여부 검증 - 인적과실 기인 사고발생 선박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병행

□ 안전관리대행업체별 선박 안전관리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선박 내역 등 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라. 예부선 선·화주 협업 증진

□ 예부선 안전운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안전사고 예방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 관련업계 및 선박검사 대행 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회의 개최

□ 국토해양부-예부선 대형화주간 협력 MOU 체결

- 주요 화주와 예부선 선사간 역할 분담을 통해 조선블록 등 과적 방지, 예인력 준수 등 기술적 안전조치 체계적 시행

< 예부선 운항 사례 >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사 대형화 · 전문화

가.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우수한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성 유지 · 관리를 위한 등록절차 및 관리방안 등 제도 개발

* 인증심사 적용지침 개정 및 해사안전법령 개정안 마련

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장 감독 강화

- 사업자(회사)의 안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선사 ·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인증심사 강화 및 강력한 행정지도 시행

- 선사의 인적 · 물적 자원 제공여부, 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 심사 강화

- ‘(가칭) 안전관리자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 안전관리자의 독립성 ·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 안전관리(책임)자간 노하우 · 정보교류 확대로 전문성 강화 유도

다. 안전관리자 교육 및 관리 강화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교육결과 · 근무이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 추진

* 전문 교육기관 선정(한국선급) 및 교육근거 마련('12.6.14)

- 안전관리대행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가칭) 안전 관리자 협의회’에 안전관리대행업 분과 운영 및 선박 관리기법 공유

라. 안전관리사 제도로 도입 방안 검토

- 항공분야의 운항관리사를 벤치마킹하여 자격증 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업계와 공청회 등 실시

* 안전관리사 : 항공의 운항관리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면허 도입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현행 면허 · 자격 기준을 안전관리사 면허 취득요건으로 개선

중점 3-3 **내항여객선 및 시운전 선박 안전운항 관리 강화**

가.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시책 수립·시행

- ☐ 「해운법」 개정안의 시행('12.12.2)에 따라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세부시행계획 마련

나. 해상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 ☐ 시운전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 '12년 1~3분기까지 해상 시운전 선박 임시항해검사 109척 실시

- ☐ 임시항해검사 시, 시운전선 항해사의 자격기준 확인 철저

- 시운전 선박의 동승점검을 통한 운항실태 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 ☐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13.8)

중점 3-4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 '해상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와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빈도 등을 평가하여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혜택 제공 추진
 - * 제도 초기 '화물 운송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여객 운송사업자'와 '안전관리대행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
-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제공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선박검사 수수료 경감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방안 강구
- 신규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인력확보
 - 「해사안전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을 통해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절차·방법 등 마련
 - 제도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 병행 추진
-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선정·공표
 - 해양사고 발생빈도,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심사결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사업자 지정·공표

중점 3-5 관공선 운영 효율화 추진

-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방안 검토
- 개별 부처와 지자체별로 소속 관공선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 제(개)정 필요성 검토 추진



중점 3-6 지자체 등 해사안전관리 조직 확충 및 역량 강화

가. 지자체 해사안전 공무원 교육 강화

- 해양·수산·항만(마리나·어항 등) 안전관리 공무원에 대해 안전의식 제고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위탁 교육 추진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광역시	○ 해양·수산관련 공무원,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해사안전 위탁교육 또는 교육자료 배포 추진
경상북도	○ 항내 위험물하역 안전관리, 항내 해상교통질서 유지 및 폐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 등 안전관리 실무 교육 시행
경상남도	○ 마리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안전관리 규정 매뉴얼에 기초한 제반사항 숙지상태, 안전·재해 예방 관련 물품 수시점검 등 교육
충청남도	○ 해사안전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교육이수 시행
전라남도	○ 마리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 안전관리 규정 등 교육 추진

나. 연안항·마리나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체규정 등 마련

- 관할 항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별로 항만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규정 마련 및 재난발생 대비 대응체제 구축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광역시	○ 어항 관리주체별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안전관리 규정 마련 * 대상 : 지방어항 15개, 어촌정주항 31개 항 - 어항 이용자의 안전관리 상태·어항시설 점검, 재난발생시 대응 절차 마련 등 자율 대응체제 구축
경상남도	○ 어항 관리주체별 안전관리방안 마련 -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체제 정비 및 해양사고 사전 차단 - 태풍, 호우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교육 강화로 자율대응체제 마련 ○ 마리나 안전관리 규정 제정을 통해 계류시설, 요트, 승하선자 등 안전에 대한 관리체제 사전 정비
	【 고성군 】 ○ 시설물 안전진단 및 사고 취약해역 안전대책 수립
	【 하동군 】 ○ 사용 중인 선착장 및 물양장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추락 방지턱 및 안전헬스 설치 ○ 어항시설물 관리 공무원, 민간인 공동 책임자 지정 운영
충청남도	○ 연안항·어항·마리나의 현황, 여건을 조사해 안전관리 대책 필요 사항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전라남도	○ 요트 계류시설, 승하선자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마리나 안전관리 규정 제정 ○ 어항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방안 마련

다.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안전 기능 강화 (농수산부)

☐ 남해안 지역에 어선 위치수신국을 설치하여 위험시 사전 경보함으로서 어업인 피해 예방 추진

* 동해안 지역 위치수신국 운영(속초, 포항, 주문진, 동해, 후포, 울릉, 울산)

- 5개 지역(여수, 통영, 삼천포, 부산, 제주)에 운영국 시스템, 중계소 시스템, 해당 어선과의 교신을 위한 VHF-DSC 및 GPS 연동 1식 설치

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해양사고방지 및 전문 연구기능 강화

☐ 선박검사 및 해상안전 업무 전문인력 충원

- 전공 분야별로 경력 기술직 채용추진('13.7)

* '12년 기술직 15명, 연구직 6명 신규 채용

□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기반 및 교류활동 강화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정기 기술교류회의 개최('13.6)

- 어선 및 내항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협의
- 선원 안전교육 지원 및 교육교재 공동 개발

○ 독일선급(GL) 기준의 국내 수용 가능성 검토 및 정보 교류('13.3)

- 수중관람 반잠수정 등 레저선박에 대한 설비기준 도입 추진
- 공기부양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보 교류

○ 중국어업선박검험국(ZY)과의 협력 강화('13.5)

- 양국의 어선 안전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수행('13.12)

- 국내 전문가와 공동으로 효율성 높은 선원 안전교육·홍보 방안, 해양사고 저감 기술 등 연구 개발 추진

마. 부산지역 내항선원 안전 멘토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 내항선원 멘토링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교재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3.2)

□ 내항선원 멘토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도입 및 시범운영('13.4)

- 시범운영 결과 분석·보완 및 확대적용 검토('13.6)

중점 3-7 국적선 안전관리 우수 국가 유지 및 항만국통제(PSC) 강화

가. 국적선의 국제적 안전평가 우수등급 유지

□ 국적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 국적선 운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지 입항전 항만국통제(PSC) 관련정보 제공, 사전 안전점검 및 현지 PSC 점검시 입회 등 지원

□ 중점관리 대상선박 지정·관리

- 외국항에서 3년내 출항정지 이력 선박, 안전관리 취약선박(TF 60 이상)을 매분기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지정하여 국내입항시 점검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외국항만 PSC 대응교육 강화 ○ 여객선사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정보공유 강화
인천청	○ 분기별 고시된 중점관리 대상선박 특별안전점검 - 선박검사 대행기관과 관련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 기관에 통보 후 필요한 조치 요구 - 점검시 선박안전과 관련된 교육 병행 실시
여수청	○ 국적선사에서 외국항 항만국통제 대비하여 사전점검 요청 시 한국선급과 합동으로 사전 점검 시행 및 교육 실시
마산청	○ 통영항, 하동항, 삼천포항 등 원격지에 입항하는 중점관리대상 선박 점검률 제고 ○ 선박검사관 직무능력 배양으로 선종별 맞춤형 안전점검 실시 - 선박검사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OJT 실시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동해청	○ 중점관리 대상선박이 관할 항만 입항시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시 중대결함은 출항정지 조치
군산청	○ 중점관리 대상선박 소유선사 선박 관할항만 입항시 안전점검 - 중점관리 선박 특별점검 및 PSC 대응 교육 등
목포청	○ 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출항정지 사례 등 교육
포항청	○ 특별점검결과 중대결함 발견시 항해정지명령 등 개선조치, 특별점검 시 선원교육 병행으로 선원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평택청	○ 주기관 F.O. 연료유 공급장치 안전대책 점검 - 연료유 교체시점, 절차 등 명문화, 주기적 개방검사, 예비품 비치 등 ○ 주요설비의 예비품 확보 유도 등 기관 예방정비 활동 강화 ○ 소화·퇴선훈련 등 비상상황 친숙화 훈련강화 - 여객동요방지 및 집합장소까지 여객유도절차 숙지
울산청	○ 관할 항만내 입항하는 중점관리대상선박의 모니터링 강화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활용, 입항시 점검대상으로 선정 ○ 특별점검시 안전관리체제 이행실태 및 비상대응훈련 상태 확인 ○ 울산항 선적의 일시자격변경 선박의 특별점검 실시 - 소화·구명설비 등 안전설비를 포함, 전반적 선박설비 상태 점검 -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 대응요령, 안전운항에 대한 교육 실시
대산청	○ 호주, 유럽, 미국 등 PSC 강화국가 기항선박 사전 점검 철저 ○ 고선령 국적선은 경험많은 검사관 점검 및 종사자 교육 실시

☐ 선령 20년 이상 고령선 검사에는 경험이 많은 검사원을 배치하고, 항만국통제 결과가 검사·심사 부실로 기인한 경우 엄격한 책임 부여

☐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및 선사 안전관리자 대응교육 실시

○ 특히, 아태·유럽지역 국가에서 공동 시행하는 집중점검에 대비하여 선사 교육 및 집중점검 기간(9~11월) 중 지원반 구성·운영

☐ 외국의 항만국통제 취약지역의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선급의 해외 검사망 신설 추진 (약 6개 지부)

나. 국내입항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강화

□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 실시

○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편의치적국 선박 및 선박안전관리지수(TF : Target Factor) 80 이상의 선박 우선점검

* '13 연간 점검목표 : 2,900척



○ 유류, 케미컬, 가스 등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TF에 상관없이 주기적인 점검 시행 및 원격지 기항 선박의 점검을 제고

* '12년 입항선박 대비 점검율 : 일반선박 4.8%, 위험물운반선 2.9%

○ 외국적 어선에 대해서도 해양오염방지 시설관련 점검 추진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 TF 80 이상 선박에 대한 2인 1조 점검 시행(점검율 20% 향상) - 안전 부실 외국적 어선에 대한 점검 강화 (10% 향상) ○ 기관 및 보조기계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13.9-11)
인천청	○ 고위험선박은 국내 입항 매 3개월마다 타선박보다 우선 점검 ○ 출항정지가 많은 ISM 등 비상대응체제 중점 점검 - 점검시 시스템 숙지, 이행실태 및 비상대응훈련도 병행 실시
여수청	○ 유조선 폭발 사고 및 해상에서의 기름오염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운반선 점검 시행 ○ 국제협약 개정사항 홍보 및 선사 간담회 개최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마산청	○ 항만국통제관이 미배치된 삼천포항, 통영항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노후한 석탄운반선 및 활어운반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강화 - 지세포, 안전항 기항 위험물운반선, 가스운반선 점검 강화 ○ 중량화물운반선 및 한중일 운항 일반화물선 점검 내실화 - 농무기, 태풍발생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시기를 중량화물운반선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운영(8-9월)
동해청	○ 결함신고 선박 및 외국적 어선(총톤수 400톤 이상) 점검 강화
군산청	○ 외국적 선박 항만국통제 지속 시행(목표:180척) ○ 결함신고 접수 선박은 상세 원인조사 및 필요시 점검강화
목포청	○ 출항정지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을 원칙으로 엄격 관리 - 엄격한 개선 조치로 기준 미달선의 안전수준 제고 의지를 높이고 결함선박의 국내 입항 기피 유도 등으로 퇴출 가속화
포항청	○ 연간 10회 이상 포항항 입항선박 점검 강화 ○ 사고의 주요원인인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ISM분야 중점점검 ○ 도선사, 선원 및 항만이용자 등의 결함신고 선박 최우선 점검
평택청	○ TF 80 이상 선박에 대한 점검 목표 설정 - ‘12년 항만국통제 점검 목표 220척 대비 44척(20%) 추가 점검
울산청	○ 항만특성을 고려한 위험물운반선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 추진 - 점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섹터별 담당검사관제 운영 -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한 대형원유운반선(VLCC), 자동차 운반선 특별점검기간 설정·운영(3,10월) ○ 항만국통제관 역량 강화를 위한 스터디 그룹 운영(연 6회)
대산청	○ 안전관리 취약선종 및 노후선박 우선점검 실시 - 노후가스선, 광탄선, 장기간 미점검 선박 등에 점검인력 집중

□ 점검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인력 추가 확보 추진

- Tokyo MOU 국가별 점검률 목표(80%)의 1/2 수준인 40% 달성을 위한 인력 증원 추진

□ 항만국통제관 국내외 교육 주기적 시행

- 국내 워크숍(1회), 외국 항만당국과의 교환근무, 해외 세미나 등 교육강화 실시

중점 3-8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 공익성과 효율성을 갖춘 안전진단제도의 시행으로 해상교통 위해 환경 및 안전 사각지대 사전 예방 도모

* 안전진단제도 시행('09.11.) 후 80여건의 사업에 대해 안전진단·평가

< 해상교통안전진단 주요 내용 >

현황 조사		현황 측정		적정성 평가		안전대책
· 설계기준 · 자연환경 · 항행여건 · 해양사고 · 선박교통량	+	· 교통특성 · 해역이용자 의견 · 교통혼잡도 · 해상교통류	+	· 통항안전성 · 접이안전성 · 계류안전성 · 통항량 예측	⇒	· 사업 시행을 위한 안전대책, 또는 · 사업 시행을 위한 대안 마련



○ 안전진단제도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보완·개선

- 안전진단 결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역별 통항량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적합성 검토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대책 자문 인력풀 구성 등 안전진단시행지침 개정('13.3.)

○ 사업자, 처분기관(지방청, 지자체 등), 안전진단 대행업자 및 전문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교육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일반 3-1 선박검사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가. 취약선박별 사고 관리체계 구축

- 노후 선박에 숙련된 검사원 배치 및 검사원 수 증강('13.2)
 - 10년이상 경력 검사원, 3명이상 투입(취약부분 검사원 1명 추가)
- 해양사고 前·後 관리 강화
 - (사전) 선박검사 시 해양사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이력 파악 후 사고취약 부위에 대해 집중점검 실시
 - * 선박검사 접수시 사고이력을 표시하는 시스템('12.6월 구축)
 - (사후) 해양사고 부위에 대한 임시검사 집행
- 노후선박의 사고 취약부분 특별점검을 위한 장비 보강
 - 절연저항측정기, 내시경을 이용한 안전점검 시행

나. 어선·내항선 사고시 기술지원체제 구축

- 사고발생시 선박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여객선·예인선 등 선종별 선형자료 D/B 구축 및 손상복원성 판정 프로그램 개발
 - 여객선 및 길이 24미터이상 선박*에 대한 선형자료 D/B구축('13.6)
 - * 카페리선, 예인선, 화물선 및 어선
 -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손상복원성 판정 프로그램 개발('13.12)
 - 한국선급의 ERS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여 선박손상에 따른 대응 기술기준 분류 등을 통해 손상복원성 판정 프로그램 개발

일반 3-2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가.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 공무원 안전교육 강화

- ☐ 내항선 점검, 연안항 안전관리 등 현장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해사안전의 중요성, 안전정책 방향 및 세부 안전대책 등 국가해사 안전기본계획과 연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 시행

나.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지속 시행

- ☐ 국제기준에 맞는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실시
 - 해상교통관제사 기본교육(신규자, 2회, 29명), 해상교통관제사 재교육(2회, 28명) 및 선임 해상교통관제사 교육과정(1회, 15명) 마련
 - ☐ 관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추진
 - 선박조종(항해) 시뮬레이터 훈련, 관제센터별 자체 직무교육* 추진
- * 현장직무교육(OJT), 선박승선훈련, 및 해사영어, 친절교육 등

일반 3-3 민간 자율적인 출항·운항 통제 강화

- ☐ 민간의 자율 운항통제 확산
 - 풍랑 등 기상악화 우려시 사고 취약 소형 내항선, 어선 등이 사전 자율적 피항을 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의 제도 강화

일반 3-4 수상레저기구 등록 관리 강화

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 홍보

☐ 수상레저기구 등록 관련 홍보·계도 지속

-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및 플랜카드, 전단지, 캠페인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등록 홍보·계도
- 면허시험, 안전교육 등을 위해 현장방문 시 안전의식 고취 교육

☐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단속 강화

-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 활동 집중단속 시행 등 단속 강화

* 집중단속 실시,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적발 (20건 적발, '12.7.18~8.31)

나. 수상레저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단일 등록체계 구축

☐ 단일등록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13.6)

- 수상레저기구의 온라인 등록, 면허·교육·검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상레저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13~'15년 중기정보화 예산편성 반영(약40억) 추진

일반 3-5 **항만내 선박급유선 등의 자체안전관리체제 확립**

가.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상태 확인

- ☐ 위험물 하역업체와 선박의 자체안전관리 매뉴얼 이행상태 주기적 확인 및 매뉴얼의 내용 보완 추진
- 선박 급유업체 등 업체간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지방해양항만청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 해양 항만 청	인천청	○ 위험물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작성 표준 지침에 따라 대상업체 일제 개선 지도
	마산청	○ 선박 급유업체 자체안전관리 능력 배양 - 자체안전관리매뉴얼 작성 및 승인 기준 통일에 따른 일괄정비 - 위험물 터미널, 급유업체 안전관리자 간담회 추진(연 1회)
	포항청	○ 항내 위험물하역 안전관리 강화 -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위험물 하역현장 수시 점검
지 자 체	충청 남도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신청 시 자체안전관리 계획 수립 상태 확인
	경상 남도	○ 자체안전관리매뉴얼 일괄정비 ○ 위험물 안전관리자 간담회 추진

나. 항만 공사 시행사에 의한 관리 강화

- ☐ 항만공사 착공전 예부선 등 공사에 투입되는 선박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공사발주처 · 시행사 · 전문가와 공동으로 강구 · 시행
- 공사 시행사에서 적정 선원의 승선여부, 선박 안전관리 상태 등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 항만공사 시행현황 및 공사용 선박현황 수시 파악 ○ 공사 발주처 및 공사 선박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13.2) - 해기사 출신 안전감독관 배치, 기상악화시 대응체제 구축 유도 ○ 부산 신항 내 항만공사 업체에 대한 사전 업무협의 및 안전 작업계획 시행에 대한 관제 모니터링 실시
인천청	○ 항만공사에 투입되는 준설선, 예부선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여수청	○ 항만공사 착공시 해사안전 점검자 선임 ○ 해사안전 사고대비 각 현장별 대책반 편성 ○ 해상장비 운전자 및 선원에 대한 해사안전 홍보(교육)용 간행물 제작 및 배포
동해청	○ 공사 현장별 해상장비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선원 현황, 비상(휴일, 야간 등) 근무자 현황, 비상연락체계도 - 해상장비 규모, 투입 계획 및 해상장비 피항계획 등
군산청	○ 해상장비 사용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중점 점검(연 3회) ○ 해상장비 사용 공정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점검, 황천시 해상장비 대피계획 수립여부 점검, 비상시 관제실 및 유관 기관 대응 연락체계 가동여부 확인
포항청	○ 관내 항만건설현장 투입 공사작업선 점검(60여척) ○ 합동점검 시행(연 2회) - 공사작업선의 선체·기관·소화·통신설비 등 상태, 정박당직 준수여부 및 비상연락망 비치여부 등 점검
평택청	○ 항만공사 계획 단계시 사전에 해사안전 의견 청취 및 반영 ○ 항만공사 시행 중 상시 점검체제 유지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조치 검토·반영
울산청	○ 항만공사용 해상장비 승선원 통항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서약서 작성 ○ 주요 시기별(해빙기, 우기, 태풍내습,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 점검반에 관계전문가(선박검사관,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대산청	○ 항만공사 계획 단계부터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안전조치 검토·반영

일반 3-6 다중이용 선박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고도화 (해경청)

- ☐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이용객 증가에 맞춰 현장 중심의 해상 교통 안전관리 강화
 - 농무기, 여름철, 동절기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시행
 - 정부합동 특별교통 기간 무사고 달성을 위한 집중관리
 - 설·추석 연휴, 여름 피서철 특별교통 대책본부 운영

나. 국제여객선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 ☐ 한/중·일·러 운항 국제여객선에 대해 특별 점검기간 설정
 - 기관정비 실태, 안전관리체제(ISM Code) 이행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 * (카페리선) 주기관 등 기관분야 및 안전관리체제 이행실태
(제트포일선) 취약기기(부양기기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여부 등
- ☐ 특별관리 대상선박 선정 및 관리 강화
 - 주요 결함발생 이력 여객선, 선령 20년 이상 여객선 및 사고발생 이력 여객선을 관리대상 여객선으로 선정하여 분기별 점검
- ☐ 해운선사 중역간담회 개최
 - 안전 취약요인, 점검시 식별된 결함사항 등에 대해 선사의 자율적 개선 유도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제주해양관리단)	○ 국제여객선(크루즈선)에 대한 점검 강화 -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발생이 큰 국제여객선 점검 강화 - 여객의 안전과 직결된 ISM, ISPS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소화분야에 대한 시설 및 비상대응능력 중점 확인
인천청	○ 한·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뉴골든브릿지II호 등 한·중 국제여객선 11척에 대한 반기별(2,8월) 특별안전점검 시행 - 선박별 항만국통제관 2인 1조 점검반 구성 집중점검 실시 - 정박시간을 고려하여 점검시간 부족시 운항 중 승선 점검 추진
동해청	○ 한·러·일 국제여객선 특별안전점검 실시(반기 1회)
평택청	○ 국제여객선 사업자 간담회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 실시

다. 유·도선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 ☐ 봄철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대비, 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박 안전관리 이행실태 사전점검 실시('13.4)
- ☐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가을철 대비, 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박 및 선원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시행('13.10)



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관리강화 (경상남도 남해군, 선박안전기술공단)

- ☐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연 4회) 및 양식어장 작업대 및 유어장 바지선 야간 경광등 설치(2개소)

☐ 수상레저 및 남해요트학교 운영 안전지도

- 등록선박, 수강생 대상 수상레저, 남해요트학교 안전교육 실시
- 대통령배 및 보물섬컵 요트대회 안전지도(2회, 700척)

☐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방지 홍보 ('13.7)

- 홍보용 리플렛 제작·보급 및 안전 캠페인 주기적 실시

마. 한강에서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

☐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유·도선 및 수상레저 분야 안전계획 수립, 홍보·계도 및 긴급 구조·구난체계 유지

- 종사자 사고 예방교육, 지속적인 안전점검, 수상구조물·선박 정기 안전검사, 풍수해 대비 단계별 대피계획 보완 및 운항통제 추진

일반 3-7 항로표지 관리체계 강화

가.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 추진

□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운용 관련 S/W 개발 및 시제품 구축 등

○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기술개발 계약(2차년도)* 및 사업 추진

* 사업기간/사업비/연구기관 : '12.12.26~'13.12.25 / 9억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항로표지 운영 S/W 설계 및 기술 개발
- 시뮬레이터 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 Type) 구축
- 해역별 항로표지 시스템 영상화 구현
- 항해용 장비(전자해도, 레이다 등) 기반 영상화 구현

나. 총 893기의 부표류 관리체계 개선

□ 서·남해 부표관리소 사무실, 공장동 시설물 실시설계 및 개량 사업 추진

* 서·남해 부표관리소 종합정비사업 (1,690백만원)

○ 서해부표관리소(평택) : 사무실·선원대기실 신축, 공장동 보수, 도장실·작업장 증축



○ 남해부표관리소(여수) : 시험검사동 증축(2층→3층, 항로표지 시뮬레이션실 신설), 공장동 도장실·자재창고·계류구 창고 신설 및 증축

일반 3-8 경인아라뱃길 통항선박 관리 강화

□ 아라뱃길 운영 전담조직 편성·운영 (수자원공사)

- ‘아라뱃길 운영처(1처4팀15과)’를 통해 아라뱃길 전체 사업구간의 선박통항 관리 추진

* (항만운영팀) 부두, 주운수로 선박 운항관리 및 서해·한강갑문 통항관리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주관의 ‘아라뱃길 안전운항 협의회’에 참여하여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지원 및 대책 마련



- 요트 통항관리 전담조직 워터웨이플러스 ‘마리나팀’ 운영
 - 마리나 운영, 요트 통항신고, 수상레저기구 관리 등 전담
- 경인항 선박운항(선석)회의 구성·운영으로 갑문, 뱃길구간 선박 통항순위 조정 등 효율적 선박운항 관리 추진

중점 4-1 항만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가. 개항질서 중점관리 지침 수립·운영

□ 31개 무역항에 대한 개항질서 중점관리 지침 수립('13년 2월)

○ 순찰선 등 관공선 운용을 통한 개항내 질서위반사범 계도·단속

* 관공선(총65척) : 순찰선(25척), 표지선(19척), 청항선(20척), 측량선(1척)

□ 항만별 개항질서 중점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

○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단속 실시 및 분기별 실적 보고

□ 개항질서 특별 단속기간 설정 운영('13.5월, 11월)

○ 지방청(해양환경과), 지자체 주관으로 특별 개항단속반 편성·운영

* 운영기간(2주간) : '13.5.13~5.24(상반기), '13.11.11~11.22(하반기)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 「'13년 개항질서 중점관리지침」 수립·운영('13.1) ○ 행정선 운항을 통한 계류지별 선박계류 지도, 항만시설 사용 신청 독려, 선박수리 작업현장 안전작업 계도 ○ 남항내 제한속도 지도 등 운항질서 유지 및 해양사고 예방 ○ 북항대교 통행 관련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3.7) ○ 가덕수도 통항안전 협의체 운영 및 어촌계 홍보·교육 추진 【 제주해양관리단 】 ○ 항만이용자 간담회를 통해 선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특성을 파악하여 성향분석 자료로 활용(연 2회)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청	○ 취약시간대(일출·일몰·주말) 및 취약구역 순찰 시행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 해소 - 인천대교, 인천신항 및 선박의 불법수리행위가 빈발하는 남항·북항 지역 등 취약구역 중점 단속
여수청	○ 불법 선박수리 등 항계내 선박통항 위해요소 중점관리 및 단속 ○ 항만종사자 및 어업인을 위한 개항질서법 등 관련법령 교육·홍보
마산청	○ 급수·급유선 등 사고다발 선박 안전관리 강화(작업허가 등) ○ 취급부주의로 인한 위험물 사고 예방(교육·점검 지속 추진) ○ 강력한 행정처벌로 불법어로 행위 근절(지자체 협조체계 유지) ○ 출입신고 미필 등 불법 운항선박 단속 강화(관제 계도 등) ○ 항법 및 지방청 관련 고시 준수 단속 철저(속도 제한 등) ○ 감수보존선박 등 안전관리 강화(필수선원 재선 유도) ○ 효율적인 개항질서 단속을 위한 계절별 테마단속 추진 -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봄), 정박지 안전관리(여름), 불법 선박수리(가을), 겨울철 위험물 안전관리(겨울) 등 -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해경, 지자체) 합동단속 ○ 개항질서 단속을 향상을 위한 육상 순찰 강화 - 위험물 터미널, 수협부두 등 육상 순찰 강화(월 2회) - 순찰선의 정기 항만 순찰을 통한 사전 예방(일 1회)
동해청	○ 관공선 운용을 통한 개항내 질서 위반사범 계도·단속 - 항계내 공사작업선, 항내 위험물 하역(급유), 선박수리 등 점검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군산청	○ 상시 개항질서 단속 -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연 2회) - 해상 및 육상 수시 순찰 강화로 위법행위 사전 방지 - 대중매체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 홍보 실시 ○ 순찰선을 이용한 항로·취약해역 순찰(해양1호 이용), 불법 조업어선 단속, 부유물(위험요소)제거 및 위험물 하역시설 지도·단속
목포청	○ 특별 합동개항 단속(연 2회), 위험물 안전점검 실시(반기, 수시)
포항청	○ 불법어로·선박수리 등 항내 불법행위 근절 - 유관기관(해경, 농림수산식품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13.5월, 11월) - 개항질서 준수 취약계층(어민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선박 수리허가 시 용접공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등 확인 - 순찰선 해상순찰시 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 및 장애물 제거 병행(해양환경관리공단 청항선 협조 요청) ○ 출입신고 미필 등 불법 운항선박 단속 강화
평택청	○ 관공선을 이용한 불법 선박수리 단속 및 불법 어로행위 등 방지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울산청	○ 해양오염 및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반입신고 확인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한 단속 철저 - 항만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운반선 용접수리 제한 ○ 항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항질서 위반사범 단속 철저 - 선박 통항에 지장이 있는 어업시설 적발즉시 제거 - 소형선박과 어선이 대거 입·출항하는 일출·일몰시나 종래 개항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주말 등 취약시간대 순찰강화
대산청	○ 강력한 개항질서 단속을 통한 안전한 항만관리 추진 - 반복적·고질적 위반행태 지속적인 단속체제 유지 - 유관기관(해경, 지자체)과 공조 및 어민 등 대상 홍보 실시 ○ 불법 선박수리 등 항계내 선박통항 위해요소 적극 단속 - 중대사고로 직결되는 불법·위반행위 집중 단속
지 자 체	충청남도 ○ 항로, 항계내 불법어로 행위 금지 안내 - 어촌계에 불법어로 금지 안내문 및 항만구역 현황 도면 배부,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 및 계도 ○ 개항질서 단속 실시(연 2회) ○ 불법수리, 정박지 위반 등 해양사고 위험요소 제거
	경상북도 ○ 주기 육·해상 순찰활동 강화 ○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강화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및 폐기물 투기단속 추진
	경상남도 ○ 급수·급유선 등 사고다발 선종 안전관리 강화 및 취급부주의로 인한 위험물 사고 예방 교육·점검 ○ 항법 및 경남도 관련 고시 준수 단속 철저(속도 제한 등) ○ 계절별 테마단속 추진 -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봄), 정박지 안전관리(여름), 불법 선박수리(가을), 겨울철 위험물 안전관리(겨울) ○ 위험물 터미널, 수협부두 등 육상 순찰 강화(월 2회) 및 순찰선 정기 항만 순찰을 통한 사전 예방(일 1회)
	제주자치도 ○ 항계내 위험물 취급 안전조치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위반, 불법 선박수리, 항계내 정박 및 계류지 위반 단속 및 계도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개선

□ 해상교통관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향후 10년간 해상교통관제(VTS) 시스템 투자계획 체계화, 관제 정책 일원화 등을 통한 관제서비스 개선

* 이원화된 항만과 연안 VTS 운영체계의 문제점 개선 등 급변하는 관제 환경에 대응할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인적과실 사고 예방 맞춤형 해상교통관제(VTS)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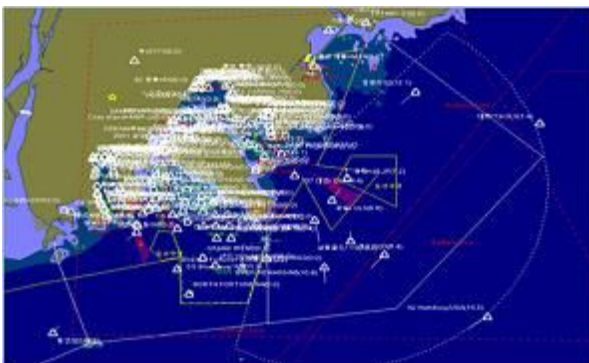
- 이용자 중심의 VTS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해양항만청 관제센터의 VTS 인적요인 개선방안 이행실태 주기적 파악·보완

□ 해상교통관제 운영제도 정비 및 효율성 향상

- 체계적인 관제시행을 관제법령 정비, 선박사고 조사·분석을 통한 미비점 개선

□ 밀집해역에 정밀 관제제도 도입

- 교통량이 밀집되는 해역에 해상교통관제 섹터 분리·운영 및 교통 폭주 시간대 관제사 추가 배치 등 추진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방 해 양 항 만 청	부산청	○ 조종능력이 열악한 예·부선 및 위험물운송선박, 여객선 등 특별 관리 대상선박 집중관제 추진 ○ VTS 장비 개량 및 물표 탐지 성능 향상을 통해 정밀관제 강화 【 제주해양관리단 】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모니터 화면상 선종별 심벌부여 지속 실시
	인천청	○ 관제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13.2)
	여수청	○ 교통량이 많은 해역이나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전담관제 실시 - 전담관제사 배치, 특수심볼 표시, 위험구역접근경고 기능 설정 - 거대위험물선과 해상크레인 등에 대한 전담관제 실시 - 선박교통 폭주시간과 해역에 대한 관제사 추가 배치 - 대형 위험물운반선, 국제여객선 등 주요 선박의 충돌·좌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통정보 제공
	마산청	○ 경남해역 해상교통관제 섹터별 VTS 영역관제 실시 - 마산 VTS(마산항, 진해항, 고현항, 안정항 및 진해만), 지세포 VTS(옥포항, 장승포항 및 지세포), 통영 VTS(통영항), 삼천포 VTS(삼천포항) ○ 관제운영 협의체 활성화 운영 - 해상교통 리포터(통신원) 제도 운영(연중실시), 마산항 “안사모” 회의 개최(연 2회)
	동해청	○ 집중 모니터링 구역(동해·묵호항 항계 내) 및 정밀관제 시간 운영(06~10시, 1팀(3명) 전원 근무 투입)
	군산청	○ 군산항 관제구역을 2섹터에서 3섹터로 세분화하여 집중 모니터링 구역 설정 운영 추진('13. 상반기)
	목포청	○ 통항량 폭주시간대 교차항로 교행구간 정밀관제 시행 ○ 여객선 특별수송기간 중 관제인원 증원 ○ 해상교통안전 취약시간대(4~8시) “안전계도 홍보방송” 실시
	포항청	○ 관제사 업무소통 활성화로 업무통일성 유지 및 관제역량 강화 - ‘준사고사례 연구회’ 개최 및 ‘해양사고 가상훈련’ 실시(분기별) ○ 관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제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연 2회) ○ 관제사 업무형태에 따른 근무편성 및 “무사고 캠페인” 시행
	평택청	○ 레이더 개량 및 섹터 관제시행 - 서해대교 내항부두 섹터관제 실시(2→3섹터)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울산청	○ 위험도가 높은 5개의 수역을 지정하여 선박통항상태 모니터링 ○ 기상악화 시 외항정박지(E1~E3)의 주요의심 선박, 항행장애물, 선박사고위험수역 등 상황별로 VHF를 이용한 자동안내방송 시행 ○ 항행환경이 열악한 예부선·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박에 대하여 선원들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제 실시 ○ 관제사례 발표 및 도선사 간담회 개최(연 2회)
대산청	○ 장안서해역 통항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제 실시 - 목적항별 심벌 부여로 통항선박 신속파악 및 적극 정보제공 - 고위험군 선박 통항 밀집시간대에 선임 관제사 배치(2인 관제) ○ 취약시간대 해상교통관제 “안전계도 홍보방송” 실시 - 취약시간대(04~08시)에 VHF활용 자동 안내방송 실시 ○ 대산 해상교통관제센터 “무사고 캠페인” 시행 - 관제실내 캠페인 표어 게시를 통해 관제사의 목표의식 고취

중점 4-2 선박항행 안전항로 확대 및 통항 위해요소 발굴·해소

가. 관할 항만내 위해요소 발굴·개선 추진

□ 유관기관, 업·단체와 협력체를 구성하여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항내 선박통항 위해요소를 주기적으로 발굴

○ 식별된 위해요소는 위험성이 제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 위해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 구성·운영 ○ 기존 위해요소 개선 지속추진(상시추진 10건, 중기 과제 3건) 【 제주해양관리단 】 ○ 항만수역 안전관리 협의회 개최(연 1회) ○ 항만·선박 종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제주 실태 안전 위해요소 발굴·개선
	인천청	○ 가스 부두 도선환경 및 접안 안전성 개선 - 한국가스공사, E1, IPA, 한국수자원공사(시화조력관리단) 및 인천항 도선사회와 협의회 구성 - 시화조력발전소 방류수, 항주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한 개선책 마련 및 기관별 시행
	마산청	○ 선박안전관리 간담회, 항만안전관리모임(안사모), 해양종사자 해사 안전 워크숍 등을 통해 선박통항 위해요소 발굴·해소 ○ 통항 위해요소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회 운영(연 2회) - 지자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등
	동해청	○ 「항만수역 안전관리 대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위해요소 발굴 - 강원지역 항만 이용자, 관련 기관 간 협의회 정례화
	군산청	○ 해양안전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분기별)
	목포청	○ 항만내 장기 정박선박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분기별) ○ 전자 어장도 DB 공유를 통한 어장허가 수면위치도 자료 확보 및 지자체와 어장이용개발 협의 수행 ○ 해상교통 통신원, 해상교통안전대책 간담회 및 여객선 항로답사 등을 통한 항로상 위해요소 파악 개선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포항청	○ 위해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팀(포항청·해운선사·도선사 등) 구성·운영(연 2회) ○ “해상교통통신원 제도” 지속 시행으로 위해요소 발굴·개선
	평택청	○ '13년 해상교통안전 위해요소 개선계획 수립·시행 ○ 해양사고방지 협의회 구성·운영(연 2회)
	울산청	○ 울산항 해상교통환경 개선 회의 개최(연 2회) ○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되고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2건) ○ 연해수역 점용 건별 명칭, 위치, 면적, 점용기간, 비상연락망 등의 현황을 일괄 표시하여 관계부서와 공유
	대산청	○ 항로 및 정박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어업보상 추진
지 자 체	부산광역시	○ 학리항 등 15개 어항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5,764백만원) - 방파제 36m, 안전웬스 278m, 접안시설 98m, 준설 18,000m³
	울산광역시	○ 안전한 어항질서 확립을 위한 어항법 위반사범 단속 및 방치 어선은 적발 즉시 해양경찰서 고발조치 ○ 시, 구·군, 지방해양항만청 합동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검(연 2회)
		【 남구 】 ○ 안전한 어항질서 확립을 위한 어항법 위반사범 단속 철저
		【 북구 】 ○ 어업지도선 해상 순찰활동 효율화를 위한 지방해양항만과의 협의체(T/F팀)구성,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
	경상북도	○ 위해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 및 운영 - 경상북도, 시군, 수협, 어민관련 협회로 구성 및 회의개최(연 2회)
	경상남도 (남해군)	○ 어항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10개소)
공 공 기 관	충청남도	○ 도선사를 대상으로 위해요소 발굴
	울산항만공사	○ 자연환경 및 항행(항로) 여건조사 - 해상교통 혼잡도, 해상교통류 진단, 통항 안전성·접이안(투묘) 안전성 평가 및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 등
	여수항만공사	○ 유관기관(여수청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유지

나. 장기 정박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 기상악화시 장기 정박 선박의 닻 끌림 방지를 위해 승무원 승선 여부, 기관 준비 상태 등 수시 확인

○ 허가 조건에 위배한 장기 정박 선박에 대해서는 강력 행정조치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 남외항 장기 정박 선박 안전점검
	인천청	○ 장기 정박 선박 관리에 대한 인천청과 인천항만공사간 역할 구체화 ○ 인천항만공사 장기 정박 선박 정보 최신화 유지 지도 ○ 안전관리가 부실한 장기 정박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여수청	○ 선박의 항만시설이용 허가 시 「정박선박 준수수칙」 안내 ○ 선박 운용에 필요한 최소 인원 승선 여부 확인
	마산청	○ 기상악화 대비 필수 승무원, 정박당직 등 안전관리기준 확인 철저
	동해청	○ 장기 정박 선박에 해상안전 조치 준수 협약서 징구
	군산청	○ 장기 정박 선박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관제실, 지자체, 대리점 등 협조체제 구축
	목포청	○ 항만내 장기 정박 선박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분기별)
	포항청	○ 해상기상을 모니터링하여 청·관제담당 직원간 정보를 공유하고, 기상악화시 피항 조치 및 투묘선박 VOC 화면상 감시 시행
	평택청	○ 방선을 통해 최소승무원 승선 및 당직수칙 준수여부 확인 ○ 선박의 주요설비·기기의 주기적인 작동테스트, 기상악화 시 비상 대응 조치 시행여부 확인·점검 및 필요시 즉시 이동명령
	울산청	○ 통항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허가조건 부여 - 항행 안전확보 사전대책 수립, 등화·형상물·음향·발광신호 및 자동식별장치 가동, 당직자 상시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대산청	○ 장기 정박을 위한 불개항장 기항시 안전대책 사전 검토 후 허가 ○ 지자체 관할 해역에 장기 정박 선박 발견시 정박현황을 통보하여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 근절 지원
지자체	경상남도(사천시)	○ 장기 정박 선박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분기별) - 통영해경,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와 합동 단속 및 협조체제 유지
	충청남도	○ 방치선박의 상시 실태파악 후 유형별 관리 및 처리

다.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한 투자 강화

- 항만의 입출항 안전확보를 위해 진입 항로와 정박지에 대한 준설 작업 및 관련 수심자료 적기 해도 반영 추진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 부산항 신항 증심 - (1단계) 준설 : 335만 ^{m³} 등 (6월까지) - (1-2단계) 준설 : 130만 ^{m³} 등 (9월 공사착공) - (2단계) 준설 : 781만 ^{m³} 등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인천청	○ 인천 북항 항로 준설 전체 대상구간 계획수심 14.0m 확보 ○ 인천항 항계밖 접근항로인 서수도 준설 시행하여 수심 14.0m 확보 ○ 내항, 연안항 등의 유지준설공사로 적정수심 확보(30만 ^{m³} 준설) ○ 인천북항 진출입항로 준설 대상구간 계획수심 14.0m 확보
	여수청	○ 광양항 LNG부두 유지준설사업 - 준설 : 91,159 ^{m³} (2,741백만원, 1월까지) ○ 광양항 제3항로 수역시설 유지준설사업 - 준설 : 964,000 ^{m³} (127억원, '14년까지)
	마산청	○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준설공사 추진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창원시) 협조체제 유지
	군산청	○ 군산항 항로 유지준설 70만 ^{m³} (50억원, 8개월) 계획 - 준설작업 착수 전 관련단체에 사업 추진방법, 기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협의
	평택청	○ 계획수심 미달구역 발생 시 항로의 적정수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가능 예산 확보
	대산청	○ 당진화력 진입항로 및 전면 정박지 증심 - 준설 : 365만 ^{m³} (639억, 1월까지)
지 자 체	충청남도	○ 보령항 항만시설 증대에 따른 항로 확장 및 준설사업 추진
공 공 기 관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 유지준설공사 시행 - 대상 : 북항 연안여객부두·자성대부두·신감만부두, 감천항 중앙부두·3부두·7부두 - 준설 : 120천 ^{m³} (2,875백만원)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 등 적기 제거

가. 항로상 불법어로 합동 단속 및 계도 강화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어로 행위 단속 및 어업인에 대한 계도활동 지속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방 해 양 항 만 청	부산청	○ 불법 어로행위 특별 합동단속(4, 10월) - 어촌계 방문 및 어업인 교육·홍보 강화
	인천청	○ 불법어로 방지 등 개항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인 교육·홍보 강화 ○ 지방청과 지자체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 및 불법어로 사전 차단
	여수청	○ 선박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로 단속 및 지도 - 항계부근에 불법으로 설치되어있는 어장·어구 신속히 제거 - 불법 낚시어선 또는 다이버를 고용한 불법어로 단속·지도 ○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협의채널 구축 - 특정해역 및 항계부근에서의 불법어로 예방을 위한 협의채널 구성
	마산청	○ 항계밖 항로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로 불법 어구 등 위해 요소 제거 및 계도 효과 배양(월 1회) ○ 해경과 불법 어로 행위 단속 시스템을 구축(상호협력 체결 등) 하여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 근절 추진 - 관제센터에서 불법어로 행위 모니터링 및 통보 → 해경정의 현장 단속 → 단속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 수협·지자체의 위반자 안전교육
	동해청	○ 동해·묵호항 1일 1회 관공선 순찰(삼척·옥계항 유관기관 요청시) ○ 수협 등 관련 업·단체를 통해 항계내 불법 어로행위 금지사항 등 법질서 준수 계도·홍보 실시
	군산청	○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상·하반기) ○ 불법조업 집중단속, 어구 실명제 이행여부 확인 및 대어민 계도 ○ 군산청과 지자체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
	포항청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순찰선,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포항수협 합동단속, 비상출동 지원 등 공조체계 유지(상반기 : 5월중, 하반기 : 11월중) ○ 순찰선 해상순찰 활동 강화 - 어촌계 홍보, 예방순찰, 고질적인 불법어구 단속 및 제거
	평택청	○ 관할지역 홍보·순찰을 통하여 고질적인 항내 불법어구 제거 ○ 도선사, 해경, 항만 역무선, 청경 등과 정보 공유체제 운영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울산청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순찰선, 해경함정, 울산시 어업지도선 합동단속, 비상출동 지원 등 공조체제 유지(상반기 : 5.13~5.24, 하반기 : 11.11~11.22) ○ 일일 항내순찰 강화로 어구·어망 제거 및 안내방송
	대산청	○ 불법 어로행위, 어구설치 집중단속 및 어민 홍보 강화 ○ 도선사, 해경, 항만 역무선, 청경 등과 정보 공유체제 운영
지 자 체	인천광역시	○ 조업시기 종료 후 미철거 어구 행정대집행 추진 - 철거 어구 실태조사 및 행정대집행 공고·집행 - 불법어구 철거 처리 어업인 홍보·계도
	울산광역시	○ 어업질서 확립 추진 계획에 의거 구·군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지자체, 기관별 구역 및 단속체제 구축 - 시, 구·군 및 지방해양항만청 협조체제 구성(연 4회 간담회) ○ 해역 및 육상 병행 단속실시(어업지도선 출동) - 어업지도선 합동단속, 비상출동시 해경함정 지원 등 공조유지 ○ 항만구역내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현지 합동 조사 실시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경찰 고발 조치
	울산광역시	【 동구 】 ○ 불법어업 합동단속 - 기 간 : 2013. 5. ~ 12. - 단 속 반 : 울산광역시, 구, 수협 - 방 법 : 육·해상 합동단속팀 구성·운영 - 단속방법 : 새벽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중점 단속실시 ○ 수산자원관리선 및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자율관리 강화 - 기 간 : 2013. 5. ~ 12. - 단 속 반 : 수산자원관리선, 어촌계 - 방 법 : 불법어업 발견 시 전화 또는 무선통신기로 신고 또는 수시 계도·홍보 【 북구 】 ○ 자체단속 실시(월 1회 이상) - 공유수면 관리 청원경찰·담당공무원 출장시 우심지역 동향 파악 및 불법어업행위 파악시 즉시 단속 실시) ○ 합동단속 실시(5월 산란기, 10월 성육기) - 울산시의 합동단속계획에 따라 육해상 단속 참여 ○ 특별단속 시행(해상단속 필요시 등) - 울산시, 해경 등의 장비 및 단속인력을 협조 받아 시행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 울주군 】 ○ 어업질서 확립 추진계획에 따라 합동단속 실시 - 기 간 : 2013. 5 ~ 12 - 단속반 : 울산광역시청, 울주군 - 방 법 : 새벽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 중점단속
경상북도	○ 개항질서 확립 추진계획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시군, 수협, 해경 파출소, 합동단속 등 공조체계 유지(6월, 11월) ○ 육상 순찰 및 어업인 홍보 활동 강화(월 1회) - 어촌계 홍보, 고질적인 불법어구 단속 철거 및 제거 ○ 동해특산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민간감시선 운용
경상남도	○ 불법어업 지도·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육상단속 강화 - 시 기 : 3월~연중 - 대상지역 : 도내 위판장, 횃집, 어시장, 대형마트 등 - 추진방법 : 위판장, 횃집, 어시장, 대형마트 판매 수산물 포획 금지 기간, 체장, 체중 위반행위 중점 단속 ○ 정치성구획어업 불법행위 일제정비 - 시 기 : 4~5월, 10~11월 - 방 법 · 방류 예정해역 불법어구 자율정비 유도 및 강제 철거 · 종묘방류 해역에 어업지도선 3일 이상 집중 순회 ·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의 치어 채포행위 강력단속 병행 ○ 산란·성육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 시 기 : 5월, 10월 - 방 법 · 어류 등 산란기 정부주관 합동단속 실시 언론매체 홍보 등 · 종묘방류, 수산자원 보호수면 등 어업지도선 집중 배치 【 사천시 】 ○ 항계 밖 항로에 대한 불법어로행위 단속 강화 - 항계 밖 항로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로 불법 어구 등 위해 요소 사전제거 및 계도 효과 배양(월 1회) ○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 증대 -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추진(반기별) 【 거제시 】 ○ 어업인 교육 및 지도 홍보 - 기 간 : '13. 3월(5일간) - 대 상 : 전어촌계 - 방 법 : 일정장소 선정 집체교육 및 불법어업 추방결의 대회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 불법어업 실태조사 - 기 간 : '13. 2. ~ 12. - 방 법 : 우심 해역, 항·포구, 위판장 등 조사 및 자진 철거 지도 ○ 불법어업지도·단속 - 기 간 : '13. 1월부터 연중 - 방 법 : 자체 및 경남도 합동단속 병행 추진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 불법어로행위 단속 취약 시간대 단속강화 ○ 수협, 해경, 어업관리단과 협조체계 강화 ○ 어업인 교육, 현지 지도 등 불법어업 추방을 위한 활동 강화 【 창원시 】 ○ 불법어업 지도·홍보를 위한 어업인 교육(분기별·수협별) ○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 불법어구 적재, 폐그물 투기 등 【 통영시 】 ○ 2013년 불법어업 단속계획 수립('12.12) - 자원남획 및 고갈형, 민원야기 업종 등 중점 지도·단속
충청남도	○ 지도·단속 체제구축 및 역량 강화 ○ 자율 어업질서 확립 및 어구 실명제 이행여부 지속적 확인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추진 ○ 접경수역 안전조업 지도활동 추진 ○ 도선사, 해경, 역무선 등과 정보 공유체제 운영
전라남도	○ 불법어업 지도·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육상단속 강화 - 시 기 : 3월 ~ 연중(월 1회 이상) - 대상지역 : 도내 위판장, 횃집, 어시장, 대형마트 등 - 추진방법 : 위판장, 횃집, 어시장, 대형마트에 수산물 포획금지 기간·체장·체중 위반행위 중점 단속 ○ 정치성어업 불법행위 일제정비(4~5월, 10~11월) ○ 산란·성육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5월, 10월)
전라북도	○ 불법어업 지도·단속 - 단속참여 : 어업지도선 4척(도, 군산, 고창, 부안) - 단속방법 : 도, 시·군 자체 단속 및 군산해경, 서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 실시 - 단속내용 · 무허가 어업 및 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 · 조업금지구역, 조업기간 위반 행위 등

나. 항행장애물 처리

- 해상교통관제·순찰선 운항 등을 통해 항행장애물 조기 발견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신속 제거 조치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 항로 및 항계 내 장애물 제거 - 항행장애물 발견 시 신속한 제거 조치(필요시 등부표 설치)
	인천청	○ 규모가 큰 항행장애물의 경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청항선과 합동 제거 실시(연중)
	동해청	○ 항행 장애물 및 수중 침적물 조사를 위한 T/F팀 구성('13.1분기)
	군산청	○ 항행 장애물 제거 계획 수립 - 불법 항행 장애물 실태조사 및 제거를 위한 수시 계획 수립
	평택청	○ 항행 장애물 접수 시 통항선박 대상 안내방송 실시(VTS센터) ○ 장애물 파악 후 합리적인 제거계획 수립 - 장애물 종류, 소유권, 위험도, 존재 원인, 제거 방안 등 검토
	울산청	○ 항내 장애물 발생 시 행정대집행으로 장애물 제거
	대산청	○ 불법 항행 장애물 설치 억제를 위한 사전 순찰항해 강화
지자체	울산시(동구, 거제시 포함)	○ 항내 장애물 발생 시 원인 행위자에게 제거 명령 신속 조치
	충청남도	○ 장애물 현황 파악 후 합리적인 제거계획 수립 - 시·군 어업지도선 협조 시행

다. 로프·폐기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항만과 연근해에 침적되어 있는 해양폐기물 등 수거·처리, 쓰레기 발생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등 활동 강화
- '13년 상·하반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10개소) 추진

- 습지보호 및 생태보호구역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 연안대청소 활성화 지원 및 연평도 침적쓰레기 처리 지원(해군)
-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로 도출된 약 10개소 정화사업 추진
- 부산항 등 무역항에 지속적인 청항선 운영
- 태풍·집중호우시 해양부유쓰레기 적기 수거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 북항, 신항, 감천항 등 주요 항만에 청항선 4척을 고정 배치하여 상시 순찰 및 해양부유쓰레기 발생 시 즉시 제거 ○ 수거 해양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인천청	○ 항만과 연안구역의 개별 정화사업 시행 -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선정 ○ 인천항의 육상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항계외의 해양쓰레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
	여수청	○ 바다사랑 실천의 날 실시(매월 1회) ○ 각종 해양정화 행사시 적극 지원
	마산청	○ 부유식 해양쓰레기 제거 - 해양환경관리공단 위탁 청방선을 활용하여 항만내 부유식 해양쓰레기 수거(청방선 시기별 탄력적 운영) - 청방선 운항 불가 구역(마산 구항, 신마산어촌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육상 순찰 및 해양쓰레기 수거(시기별 순찰 주기 탄력 운영) - 우기철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유지 ○ 침전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 '13년 정화사업 대상 지역 수요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동해청	○ 청항선 운항을 통하여 동해·묵호항 등 청항 작업 실시 - 원목, 폐타이어, 로프 등 해상부유물 수거
	군산청	○ '항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수시 바닷가 쓰레기 청소 실시 ○ 청항선의 운항해역과 기간을 지속적 확대, 폐그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부와 적극 협조
	포항청	○ 1사 1연안(45개 단·업체) 가꾸기 운동 활성화(월 1회) ○ 민·관·군 합동 해양정화 활동(연 1회) ○ 항계내 수중침적 폐기물 인양(반기 1회) ○ 청항선(경북939호)에 의한 해양부유폐기물 수거(160회)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평택청	○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처리량/예산액 : 150톤 / 25,000천원) ○ 바닷가 대청소 실시 : 6~8회/연
	울산청	○ 해양환경정화 지속 추진 -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분위기 지속(분기별 1회) - 민·관 합동 해안정화 활동(연3회), 수시 청항작업(청항선 1척) - 로프·페그몰 등 바다쓰레기 수거(연중)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및 협의(연2회) ○ 업무 범위를 항계구역 밖까지 확대하는 적극적 해양환경 관리 - 위탁운영중인 청항선 작업범위에 특별관리해역(방어진항, 미포항)을 포함하고 폐기물 실태 조사 및 환경개선조치 시행
	대산청	○ '13년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추진(5회/약 45톤) - 항만내 배후부지 및 호안 등 항계내 쓰레기 수거·처리 ○ 청항선을 통해 동해·묵호항, 삼척항, 옥계항 청항 작업 실시 - 원목, 페타이어, 로프 등 해상부유물 수거
지 자 체	부산광역시	○ 청항선 운항을 통해 항내 해상부유 쓰레기 적기제거 및 홍보
	인천광역시	○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 기 간 : '13. 2 ~ 12. - 사업규모 : 700톤(호우기간 집중 수거) - 예 산 액 : 1,500백만원(국비 40%, 시비 60%) - 사업위치 : 강화군 염하수로, 석모수로 - 사업내용 : 부유차단막 설치, 청항선 운영 및 수거쓰레기 처리 ○ 해안쓰레기 처리 - 기 간 : '13. 2 ~ 12. - 사업규모 : 5,800톤 - 예 산 액 : 4,242.5백만원 - 사업주체 : 강화군(1,800톤), 옹진군(4,000톤) ○ 해양쓰레기 처리 - 기 간 : '13. 2 ~ 12. - 사업규모 : 4,000톤 - 예 산 액 : 1,550백만원 - 사업내용 · 중구, 남동구, 서구, 옹진군은 육상기인 및 해안쓰레기 처리 · 강화군은 어업활동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매비 지원 ○ 침적쓰레기 처리 - 기 간 : 연중(특히 7~8월 금어기 중점 실시) - 사업규모 : 310톤 - 예 산 액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해양폐기물 수거선단을 투입하여 침적 쓰레기 수거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울산광역시	○ 해양폐기물 정화 지속 추진 - 분야별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 추진(구·군별) - 민·관 합동 해안정화 활동 추진(스킨스쿠버 동호회 협조) 【 동구 】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 기 간 : '13. 3 ~ 12. - 사업추진 : 폐어구,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인건비 및 처리비 - 예 산 액 : 80백만원 - 사 업 량 : 해양쓰레기 150톤/ 항·포구 및 해안가 등 ○ 조업중쓰레기 수매사업 - 기 간 : 2013년 3월 ~ 사업비 소진시 - 사 업 비 : 55백만원(국비33, 시비11, 구비11) - 수매대상 :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의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 북구 】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 기 간 : '13. 4 ~ 12. - 사업내용 : 태풍 등 자연재해시 발생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사업주체 : 울산수협 - 기 간 : 2013년 3월 ~ 사업비 소진시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30, 시비10, 구비10) - 사 업 량 : 약 60톤 【 울주구 】 ○ 민·관 합동 해안정화 활동 추진(해당 어촌계)
경기도	○ 해안가 쓰레기 수거 - 기 간 : '13. 1 ~ 12. - 사업규모 : 1,146톤 - 예 산 액 : 345백만원 - 사업주체 : 안산(556톤), 화성(389톤), 시흥(100톤), 김포(67톤), 평택(34톤) - 사업내용 : 어업인이 방치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소각처리 ○ 해양 폐기물 정화 - 기 간 : '13. 1 ~ 12. - 사업규모 : 67톤 - 예 산 액 : 67백만원 - 사업주체 : 안산(33.5톤), 화성(33.5톤) - 사업내용 : 어선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한 해양폐기물을 수협에서 수매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경상 북도	○ 공공근로사업 해안가 쓰레기 처리사업 시행 ○ 해안가 쓰레기 및 항만내 폐기물 수거처리(연중) ○ 민·관·군 합동 해양정화 활동(연 1회) ○ 항계내 수중침적 폐기물 인양(연 2회) ○ 방파제 등 항만친수시설 폐기물 공공근로 실시(월 1회) ○ 조업중 인양쓰레기수거사업 및 양식어장정화사업(연 160회)
경상 남도	【 사천시 】 ○ 해상 부유 해양쓰레기 제거 - 선상이동식 쓰레기 집하장 이용,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주기적인 해양환경 순찰활동 및 적기 해양쓰레기 수거 - 우기철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유지 * 수협,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 거제시 】 ○ 어장정화·정비업체 위탁 정화선 활용, 부유식 해양쓰레기 제거 ○ 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 동부면, 장목면 내 일원 연근해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 사등면 가조도 일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추진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 고성군 】 ○ 방치된 어업폐기물 수거·처리 - 항·포구 등에 방치된 폐어망 전문 처리업체 전량 위탁처리 - 연안 유·무인도서 등 우심지역 어업지도선 이용 주기적인 예찰 및 해양쓰레기 수거(시기별 예찰 주기 탄력 운영) - 장마, 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협력체제 유지 * 자율관리공동체, 수산경영인연합회, 어촌계, 해양환경단체 등 ○ 연근해 침적폐기물,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 고성군 연근해 침적된 폐어구, 유실어구 등 수거처리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위탁(군수협)처리
	【 남해군 】 ○ 연안침적물수거, 해양쓰레기수매, 어업폐기물처리 추진
	【 하동군 】 ○ 연근해 침적폐기물,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 하동군 연근해 침적된 폐어구, 유실어구 등 수거처리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위탁(군수협)처리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 창원시 】 ○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낙동강하구 쓰레기 비용부담을 통한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유입 저감 - 굴폐각 친환경 처리 및 친환경 부표·어구 사용 확대로 해상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해양 및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한 해양쓰레기 연중 수거·처리 - 연안어장 정화 및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통한 어장환경 개선 - 수거된 쓰레기의 바다 재투기 방지를 위한 선상집하장 설치 - 도 어장정화선을 활용, 도서지방 해양쓰레기 수거 ○ 시민 참여 확대 및 홍보 교육 강화 -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 등 시민 참여 확대 * 봄맞이, 바다의 날 기념, 피서철, 추석맞이, 국제연안정화의 날 등 - 어업인 대상 해양쓰레기 줄이기 홍보 교육 주기적 실시 【 통영시 】 ○ 해양쓰레기 수거 종합계획 수립('13.1) ○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 교부 신청('13.2)
충청남도	○ 충남 연안 및 해상구역 쓰레기 수거 처리 - 기 설치된 선상 집하장을 활용하여 원활한 수거처리 도모
전라남도	○ 친환경 어구 사용 확대 ○ 수거된 쓰레기의 바다 재투기 방지를 위한 선상집하장 설치(7개소)
전라북도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사업량 : 900톤(군산 450, 부안 450) - 사업비 : 482백만원 (국비 290, 도비 48, 시군비 145) 투자 · 군산시 : 241백만원 (국비 144.6 도비 24.1, 시비 72.3) · 부안군 : 241백만원 (국비 144.6 도비 24.1, 시비 72.3)
제주특별자치구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지원대상 : 지구별수협 6개소(위탁계약 시행) - 사업기간 : '13. 1~'13. 12 - 쓰레기 추정량 : 450톤 - 소요재원 : 250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 대상해역(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어업 어장 - 사업기간 : '13. 1~'13. 12 - 쓰레기 추정량 : 1,550톤 - 소요재원 : 5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의 추진에 앞서 동 어구의 효과를 사전 검증하는 등 본 사업 추진의 문제점 최소화(경북, 경남 남해군)

○ 생분해성어구 지원사업으로 어망지원 및 폐그물수거(연중)

○ 생분해성어구 보급 및 폐 어망 수거에 따른 어민교육(연 2회)

라. 침몰선·방치폐선 관리 강화

□ 침몰선박 관리 시스템 운영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침몰선박 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침몰선박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 부산항 내 방치폐선 실태를 조사하여 선박조사서 등 기록 관리 ○ 방치폐선 등 제거 -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선박을 대상으로 제거명령 -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은 고시 후 직권제거 조치
	인천청	○ 매 분기별 방치선박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 실시(순찰선 3척 동원) - 합동점검을 통해 소유자 확인·미확인 선박, 장기 방치 우려 선박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선박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치방안 마련
	여수청	○ 방치선박 정기(연 4회) 및 수시점검, 취약지구 중점 점검
	마산청	○ 방치폐선 발생 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현장 실태조사(년 2회)
	동해청	○ 방치선박 일제 점검 실시(반기 1회)
	군산청	○ '13년도 방치선박 일제점검 실시(매 분기) - 신규 방치선박의 신속제거 추진
	포항청	○ 방치선박 일제 점검 실시(상반기, 하반기) - 방치선박의 현지 확인 및 전수조사 후 유형별로 구분·관리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은 우선 제거 명령하고, 불응 시 고발 조치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평택청	○ 평택당진항 내 지역별 방치선박 현장 확인 및 유형별 관리
	울산청	○ 점검반을 구성(해양환경과장, 해양계장 외 3명)하여 육상 및 해상 현장 확인 및 행정대집행 시행
	대산청	○ 대산항 항계내 주기적(분기별) 점검을 통한 방치폐선 제거
지 자 체	부산 광역시	○ 항·포구별 담당공무원 지정 및 육상 순찰 조치 - 장기 정박어선 및 미수검어선 확인 점검 추진
	경상 남도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창원시)	○ 방치폐선 발생 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현장 실태조사(분기별)

중점 4-4 해상교통관제(VTS) 인프라 확대

가. 해상교통관제(VTS) 시설 확충 및 현대화

□ 선박 안전 취약 지역 해상교통관제(VTS) 시설 확충 (국토해양부)

- 제주 외항 개장('11.10)에 따른 제주항 관제센터 건립('13.10) 및 부산 북항대교 · 인천 · 경인 · 완도항 VTS 장비 확충*('13.12) 추진

* 부산 북항대교 전담 관제석, 인천 · 경인 · 완도의 기상 및 통신장비

< 전국 해상교통 관제센터 >



□ 최적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VTS 시설 현대화

- 장비의 내용연수(10년)가 경과된 노후 VTS 레이더시스템 5개소*와 마산 · 평택항 관제장비** 개량 추진

* 인천 외리, 목포 몽하도, 부산 감천, 동해 묵호, 군산 장산도

** 마산항 : 관제운영 서버 등 / 평택항 : 초단파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등

나. 연안해역 교통관제 해역 확대 (해경청)

□ 연안해역에서의 교통정보 확대 제공을 위해 연안 VTS 확대

○ '14년 통영 연안 VTS 개국을 목표로 센터 건축 등 인프라 구축

* 연안 VTS 운영현황 : 진도('06.7월 개국), 여수('12.11월 개국)

다. 부산남항(연안항)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산시)

□ 어선, 내항선 등 선박통항이 빈번한 부산 남항*의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CCTV 기반의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일평균 450여척 계류, 1,170여척 통항(시간당 최대 120척)

○ 선박안전 관리시스템 구축비 예산확보('12.12월),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13.2~6월), 관제센터 관리요원 채용·교육('13.7~8월) 및 부산남항 통항관제센터 운영개시('13.8월)

중점 4-5 e-Nav 대응체제 마련 및 해양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e-Navigation을 위한 전자항법 시스템 구축

○ 국가 e-Navigation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논의동향 대응, 국내 도입방안 검토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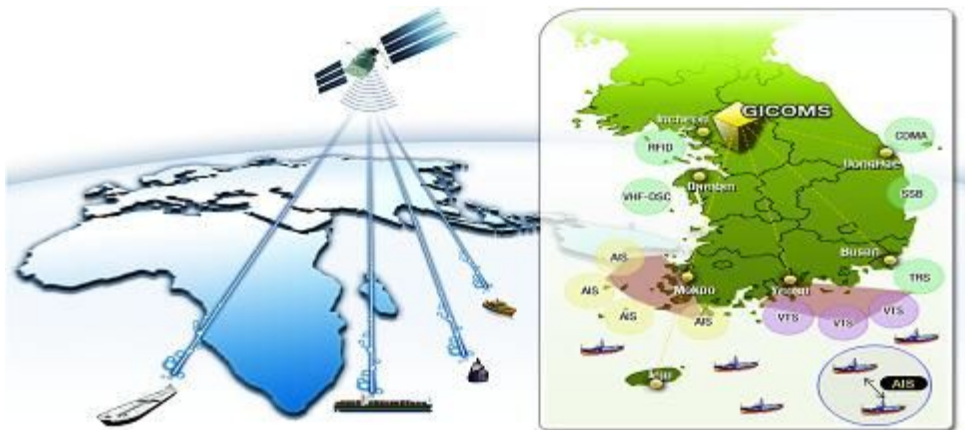
○ 여수·마산권역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4.5억원)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접근성 향상

○ 사용자 접근성 제고 및 선박 안전관리 기능 등 강화를 위한 인터넷 기반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13.10)

* '13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예산 100백만원)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개념도 >



□ 정보 연계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데이터 제공

○ 기상정보, 선박검사 정보 등 외부기관과 해양안전종합정보화(GICOMS) 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구조 개선('13.11)

* 기상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앙해심 등 4개 기관과의 해양안전정보 연계

- e-Navigation 초기 시행을 위한 쌍방향 지능형 해양안전정보 융합 단말기 개발 연구 지원('13.9 ~ '14.8)

* IMO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e-Navigation 단말기 개발 R&D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어선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를 통한 종합해상교통안전 시스템 구축('13.11)

- 現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를 기반으로 U-기반 스마트 해상교통안전정보화 시스템 시범사업(부산항 등) 추진('13.6~12)

* GICOMS 정보제공기능 구현, AIS를 활용한 해양안전정보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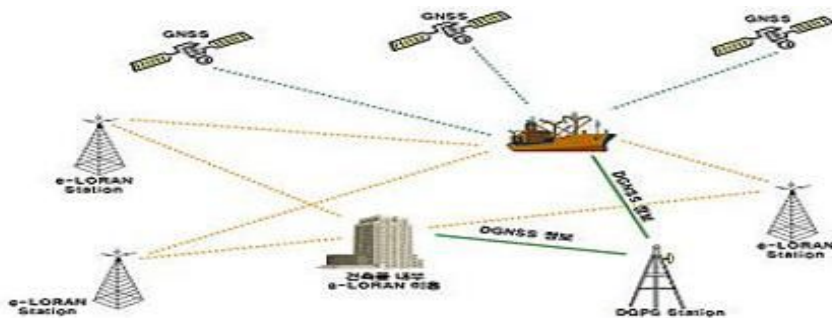
중점 4-6 미래형 표지정보 제공

가. 첨단 지상파 항법(e-Loran) 시스템 설치 및 개량

- eLoran 송신국 구축용 부지 3개소(제주, 울릉, 강화) 확보 완료 및 부지 정비, 송신국사 건축 등 토목·건축공사 착공

* 공사기간/소요예산 : '13~'15(3년) / 460억원

< e-Loran 개념도 >



나. 신개념 선박을 위한 해양교통시설 설치·운영

-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에 대비하여 항로표지 단계적 설치 추진
 - (시험운영 시) 이착수 구역 지점을 표시하는 임시 등부표(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설치
 - (운영 개시) 이용자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AtoN AIS) 설치
- AIS를 활용하여 선박에 교통정보 확대 제공
 - 첨단 IT 기술이 도입된 '항로표지용 AIS'를 등부표 등 항로표지에 설치하여 항해선박에 동적·정적 정보* 확대 제공

* 동적 정보 : 기상, 풍향, 풍속, 조류 등 / 정적 정보 : 항로표지

< 항로표지용 AIS 활용도 >



다. 해양교통시설 확충 및 노후 항로표지 시설 개량

- 주요 선박 통항로에 등부표 등 항로표지 확대설치*, 노후 항로표지에 대한 유지·보수 및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 대체 건조·수리** 추진



* '08년부터 '12년까지 해양교통시설 192기 확충

** 항로표지선(인천 95톤) 대체건조, 항로표지선 19척 수리

- 녹색에너지 이용 항로표지 시스템 구축

- Hybrid 전력생산시스템('12년 개발) 해상 실용화 연구, 해상용 LED 등명기 확대 보급 및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 개발 추진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 나무섬동방·이동항 등표 신설('13. 3 ~ '13. 9)
	【 제주해양관리단 】 ○ 진여등표 설치, 비양도등대 보수, 죽도등대 개량 및 무인등대 배후광 개선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청	○ 여객선 및 어선의 안전을 위한 등표 설치(1건) ○ 노후된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7건) ○ 인천신항 개장에 맞추어 항로표지 재배치
여수청	○ 통항 위해요소 제거 등을 위한 해양교통시설 확충 - 수중 암초(신위험물) 상 등표 신설 등을 위한 실시설계(4건) - 우모서등표, 엄수도등표, 신강서등표 신설 ○ 통합관리시스템의 통신 방식 다중화(AtoN AIS, TRS 등) 추진 ○ 항로표지 운영률의 국제기구(IALA) 권고기준 충족 - 무인표지 관리효율 극대화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정비 - 남해권(여수, 목포, 진도, 제주, 마산일부) 부표류 적기 교체(정비) - 사설항로표지(시설 및 관리자) 관리실태 지도·점검
마산청	○ 해양교통시설 운영율 제고를 위한 기능 점검정비 - 무인등대 및 교량표지 (2개월 1회), 등표 및 등부표(월 1회) 점검 - 사설항로표지(37개사 199기) 관리실태 현장 지도 점검(연 2회) - 마산·진해 등 주요 항만 및 항로의 야간 기능점검 강화(연 4회)
동해청	○ 동해항 도등(지향등) 설치 공사 등 4건 - 동해항 야간 입항선박의 변침 및 편위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동해 기상대 옥상 방법용 투광등을 적합한 항로표지로 설치 검토 ○ 방파제 등대 개량공사 등 12건 - 전진항, 후진항, 우암진항, 안인진항 방파제 등대
군산청	○ 달루도, 궁항항 및 식도 입출항 선박을 위한 등표(3기) 신설 ○ 소규모 항포구 항로표지(등대) 확충 -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항 방파제 끝단 방파제등대(철탑/1기) 신설 ○ 항로표지(등표) 설치(2기)를 위한 설계용역 시행 - 위도북방등표 외 1개소
목포청	○ 소규모 항포구·해상 간출암상에 해양교통시설 설치 및 개량 - 설치 : 등대 4기(원산항방파제등대 외 3), 등표 4기(안마도서방등표 외 3) - 개량 : 등대 6기(안마항남방파제등대 외 5), 등표 3기(승서등표 외 2) ○ 무인표지 정기 점검정비 및 취약기별 특별점검(356기) ○ 항로표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 기상신호시스템 장비개량, 집약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등
포항청	○ 방파제 등대 광력증강 - 전구식등명기(250mm)를 LED로 교체 ○ 방파제 등대 설치 - 소규모 항포구 방파제등대에 항로표지 시설 확충(5개소)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평택청	○ 항해 위해요소(암초) 및 소규모항 항로표지시설 확충 - 북암등표(1기) 및 소규모항방파제등대(6기) ○ 항로표지 기능강화 및 노후 시설 정비 - 무인등대 진입로 정비(2개소) - 무인표지 대수선공사(도장 등) - 항로표지 업무용선박(2척) 수리 ○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항로표지 기능유지 - 무인표지 점검정비(등대2개월 1회/등표, 등부표 1개월 1회) - 항로표지시설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태풍 내습기, 동절기 등)
울산청	○ 항로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용역 시행(2건) ○ 나사항(지방어항) 정주어선 통항안전 확보를 위한 방파제등대 설치(1건) ○ 간절곶등대 무신호, 표지선 등 노후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4건)
대산청	○ 등표 및 방파제 등대 신설 추진(10건) - 고대도 동방등표외 1개소 실시설계('13.3~11월/3,730백만원) - 소규모 방파제등대 4개소 신설('13.3~11월/540백만원) ○ 해양교통시설 개량공사(5건) - 장고도항 방파제등대 개량공사외 4건 추진('13.3~12월/959백만원) ○ 해양교통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하자보수 용역 시행

라. 최적의 항로표지 서비스를 위한 관리 강화

☐ 「서해권 항로표지 관리운영 실태 연구용역('11)」 결과를 반영하여 항로표지 기능개선 추진

* 개선사항 : 등질 · 도색 조정, 위치이동 및 시설폐지 등

☐ 항로표지의 철저한 기능유지로 최적의 항로표지 서비스 제공

○ 국제기준 운영을 달성을 위한 항로표지 점검정비 강화

- 「항로표지시설관리지침」에 의거 점검 · 정비 실시

- 국제기준에 따른 카테고리별 운영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점 4-7 정밀도 높은 해도 제작 · 보급

가. 연안 해역 기본 · 정밀조사

□ 전남 고흥 부근에 대한 연안해역 정밀조사 실시(1,200km²)

* '03~'17년 연안해역 32천km², 109개 국가어항에 대한 기본 및 정밀조사 추진,
'12년까지 연안해역 18,766km²(59%) 및 61개 국가어항 조사완료

□ 안흥, 덕적도항 등 12개 국가어항 부근의 해저지형, 노 · 간출암, 저질 등의 정밀조사 실시

□ '해남~남 · 동해안 도서부' 해안선 조사

* '12년까지 도서부 해안선 6,775km 중 4,664km(69%) 조사완료

나. 주요 항만해역에 대한 정밀수로측량

□ 평택 · 당진항, 군산항 등 10개항 항만, 진입항로에 대한 항내의 안전 위해 요소(암초, 침선 등) 파악을 위한 정밀 수로측량 실시('13.3~11)

□ 선박 통항이 빈번한 부산, 인천, 울산 3개항은 수심 변화가 심한 해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정밀 수로측량 실시

다. 국가어항 및 연안해역 대축척 해도 제작

□ 최신 정밀 수로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무역항 · 연안항 · 국가어항을 포함한 관할해역의 신간, 개정판, 재판 및 보정도 제작('13.3~12)

○ 신간(2종), 개정판(147종), 재판(87종), 보정도(100종)

□ 선박의 안전항해 및 항만 입 · 출항에 필요한 수로서지 제작

○ 한국연안 항로지, 등대표, 천측력 등 11종 서지 간행

- 수로서지 후보표 간행을 통한 최신자료 업데이트 및 정확성 유지
- 수심별 색상, 음영기법을 이용한 해저기복도 제작으로 해상안보 및 군 작전정보 지원(해저기복도 15종 제작)

라.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및 수로정보 서비스 개선 추진

- 고품질 전자해도 제작·보급으로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선박의 자동항해 시스템 지원
 - 고품질 전자해도 제작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 간행 전자해도에 대해 격주별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 차세대 전자해도(S-101) 전환계획 수립 및 서비스 기반 구축
 - 국제수로기구 차세대 전자해도(S-101)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표준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해도 전환(S-57 → S-101) 계획 수립 등 관련 기술 연구
 - * 국제 해양 GIS 표준기술 기반 차세대 항행정보지원시스템 개발 추진(지경부)

마. 최신 항해안전정보 지속 제공

- 해도 등 수로도서지의 수정사항 및 해상교통 관련정보를 선사 등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항행통보 및 경보 제공
 - 국·영문 항행통보 간행(약 3,600부, 600개소/매주) 및 인터넷 서비스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항로표지 등질변경 시 국문명칭 삭제 등 항행통보 내용·형식 개선
- 해상사격훈련, 표류물, 침몰·좌초 등 긴급사항 발생 시 방송사 등 관련 기관에 스마트폰 어플, Fax, SMS 발송
 - 매년 약 390회의 항행경보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가. 계류시설 개발시 승·하선자 안전성 검토

- 조석 차 등을 감안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도록 항만 계류시설 계획 단계부터 안전성 사전 검토 추진
 - 항만 계류시설 계획시 해사안전 관련 관계자 의견청취 및 반영
 - 항만개발 후 반영된 안전조치의 실효성 지속 확인 · 보완

나. 내항여객선 기항지 선착장 시설 개선

-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도서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단계적 추진
 - * 1차년도('12년) 낙도보조항로 기항지 접안시설 2개소(군산 장자도, 목포 가사도) 보강사업 시행(소요예산 10억)
 - 인천 · 군산 · 목포청 관할 기항지 접안시설 4개소 보강사업 시행

일반 4-2 도선구역 합리적 조정

□ 부산항 안전도선 방안 마련

- 부산항 입항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석별 적정 접안기준 마련을 위한 ‘부산항 안전도선 연구용역’^{*} 추진

* 용역추진 배경 : 부산항 기항 선박의 대형화, 입·출항 선박 증가로 선석 시설 능력을 초과(1, 5, 8부두 등)하는 선박의 이접안시 도선 안전성 문제 발생

-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부산청, 부산항 도선사회 등) 합동 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 과업범위 등 도출

일반 4-3 해양기상 예보 정확성 향상

가. 연안 해역에 해양 이상현상 감시 체계 구축

- ☐ 해양 이상현상 및 해역별 특성을 조사하여 최적의 관측망 구축
- ☐ 해역 특성을 고려한 경보발령 기준 마련 및 경보기술 개발
- ☐ 해양사고를 야기하는 위험기상 현상 조기 예측 및 분석 체계 구축
 - 해양에서의 위험현상(장주기파, 저염수, 이안류 등) 조기 대응을 위한 '해양기상 위험현상 조기 감시시스템' 구축 및 예측능력 개선
 - 너울 예보 및 이안류 예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나.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 ☐ 해양기상관측 신기술 도입으로 해역별 최적 관측망 구축
 - * '12년말 기준 해양기상 관측 네트워크 현황 : 해양기상부이 9개소, 등표기상관측장비 9개소, 파랑계 6개소, 파고부이 30개소, 수위계 15소, 유향유속계 1개소, 도서용 AWS 4개소, 선박기상관측장비 2개소, 기상1호
- 연·근해 위주의 관측망 극복을 위한 광해역 해양기상 관측망 확충
 - 선박기상관측장비 5개소·해양기상부이 1개소 확충, 표류부이 10대 구매, 해양기상부이(덕적도, 칠발도) 노후장비 교체
- 이상파랑 및 너울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방재 관측시스템 2개소 확충
- 평수구역 및 연안바다 등 특정관리해역의 예보 세분화를 위한 파고 부이 6개소 확충, 등표(간여암) 노후장비 교체

-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항만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항만 내외의 특화 예보서비스를 위한 항만 기상 관측망 구축
- 해양기상관측장비 운영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양기상 인트라넷 포털 구축)

다. 해양기상관측 전용선박을 활용한 위험기상 사전 관측

- 해양기상관측선 ‘기상 1호’를 활용하여 위험기상 현상의 효과적인 선도 관측 및 집중 관측 수행
 - 3차원 입체 및 목표 관측을 통한 해양기상 감시 능력 향상
 - 해양기상 비교 관측 및 선도 관측을 통한 예보 능력 향상

라. 해양기상 예측 신뢰성 증진 및 예보 신속 전달

- 해양예측기술 개발 및 선진화
 - 위험 해양기상현상 감시·분석기술 향상 및 해양예측기술 개발
 - 실수요자 중심의 해양기상정보 개발 및 실시간 전달체계 강화
 - 해운대 이안류 예보서비스를 위한 예측모델 실용화 및 동해안, 제주도 등 대상 해역 확대
- 해양기상정보 전달매체 개발 및 서비스 강화
 -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양기상 서비스를 위해 해양기상방송,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스마트 앱 및 문자 서비스 콘텐츠 강화

일반 4-4 어장표지 표준화

- 지자체간 공동으로 어장표지 표준화 방안 검토·마련 및 어업면허 허가시 통일된 어장표지 설치 유도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광역시	○ 해면어업과 한정어업 어구표지 표준화 추진 ○ 어업 면허·허가 처분시 어장표지 이행지도
울산광역시	○ 면허·어선어업의 어장 및 어구 실명 표지(87건 / 1,361ha) - 미실시 어장에 대한 지도 공문 발송 및 이행 적극 독려
경상남도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 어업권 및 구획어업 표지 단계적 설치 * 어장현황 : 거제시 895건(6,053ha), 고성군 420건(3,919ha), 하동군 57건(828ha) - 어업면허 처분 및 구획어업 허가 처분시 어장표지 이행 지도 - 어업인 교육 및 어촌계장 월례회 등 어장표지 이행 홍보 지도강화
충청남도	○ 어장표지에 대한 표준화 방안 홍보
전라남도	○ 타 시·도와 협조하여 전국적인 표준화 방안 마련 - 각 지자체의 통일된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중앙 정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여 세부방안 마련

일반 4-5 해수유동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가. 실시간 해양관측 및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 연안·항만해역의 해양·기상정보 신속 제공
 - 삼천포 조위관측소 신설 및 실시간 해양정보 제공
 - 울산항 안전관리 해양종합정보(실측예측) 융합서비스
 - 연안·항만·항로 등 해류(연 4회) 및 조류관측(15점)

나. 해수유동관측시스템 유지 및 운영 (울산항만공사)

- ☐ 울산신항 일원에 해수유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상관측 자료를 울산항 이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확보 추진
 - 조류관측자료 결과 해양조사원 전달 및 울산항 이용자 배포(분기별)
 - 시스템 정기점검, 층별 해수유동관측 인양 및 정비(7월, 10월, 12월)

중점 5-1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MAS) 대응능력 제고

가. IMO 회원국 감사('16년 발효) 수감능력 배양

- ☐ IMO 회원국 감사제도 합동작업반 회의('13.3)에 참가하여 감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계획 마련
- ☐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적정성 여부 등 점검을 위한 절차서 및 점검표 개발

* IMO 회원국 감사시 감사관이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로 기국, 항만국, 연안국 등 선박관리 역할별 국가의 의무사항 규정('13.11월 채택예정)

나. 전문 감사인력 확보

- ☐ 우리나라의 IMO 감사 수감 및 타 회원국에 대한 감사시 감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IMO의 감사관 양성교육('13.5) 수료를 통해 IMO 감사관 자격 취득

중점 5-2 **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가. IMO A그룹 이사국 7연임

- ☐ IMO 제28차 총회('13.11)에서 실시되는 이사국 선거에서 IMO A그룹 이사국 7연임 추진
 - 유관부처·기관과의 공조를 포함한 다각적 전략계획 수립 및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

나. IMO를 통한 산업계 국익창출 방안 모색

- ☐ 해운·조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IMO 전략대응 T/F'를 구성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지향적 과제 발굴
 -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차원의 T/F를 구성하여 미래지향적 과제 발굴 (지식경제부)
 - IMO 회의 의제문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 반영 추진
- ☐ 국제 해사동향 발표회 개최(연2회)
 - IMO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정책변화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사동향을 해운·조선 관련업계에 적기 제공

다. '국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 ☐ 대형 오염사고 발생시 국익 확보를 위해 IOPC Fund 회의에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유관기관, 업·단체간 협력 MOU 체결

- IOPC Fund 회의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자문위원 구성·운영
 - 각국 정부대표단과 장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지지도를 확보하고
아국 의견과 정책방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인재 발굴
- IOPC Fund 회원 주요국과 긴밀한 협조로 교류 활성화 추진

중점 5-3 양 · 다자간 교류 및 기술협력 공고화

가. 양 · 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 외국항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 및 해사안전 부문에서의 차별 방지 등을 위해 중국 · 일본 · EU · 호주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 개최
- IMO 현안(선박온실가스 감축, 선박 평형수 관리협약 등)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및 해사정책 정보교환 등

< '13년 양자 회담 계획 >

구분	차수	장소	일시
한·중국	14차	한국	'13.5
한·일본	17차	일본	'13.10
한·EU	3차	런던	'13.5
한·호주	3차	한국	'13.4
한·싱가포르	3차	싱가포르	'13.1

- '아 · 태지역 해사안전기관장 회의(APHoMSA)' 등 정책 결정자가 참여하는 다자회의에 참여하여 국제 해사안전 정책 선도 추진

나.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위상에 맞게 해사분야의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해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13.10)
- IMO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조선 · 해운 분야 국제기준 제 · 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에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서울국제해사포럼 >



다. 해사안전 기술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IMO 기술협력 자금을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항만정보화 사업, 유류오염 방제 교육, 항만국통제관(PSCO) 교육 등 9개 사업에 자금 지원(총 67만불)

< '13년 세부 추진사업 >

프로그램	예산(USD)	장소	일시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IMO)	220,000	스웨덴	'13.1
항만정보화 시스템구축 타당성조사(항만운영과)	90,000	베트남	'13.1
유류오염방제 교육(해양환경공단)	70,000	부산	'13.2
여성인력개발 세미나(해양수산연수원)	70,000	부산	'13.3
기술협력사업 영향평가 용역사업(해양수산연수원)	35,000	IMO	'13.3
IMO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IMO)	75,000	아시아	'13.5
런던협약 준수 장벽제거 사업(해양보전과)	15,000	동남아	'13.5
국제협약 DB 프로그램 지원(KR)	30,000	한국	'13.7
PSCO 전문교육 과정(Tokyo MOU)	66,500	인도네시아	'13.미정
총 9개 사업, 67만불	671,500		

중점 5-4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가. UN 차원의 해적퇴치 방지 주도

-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제3작업반 회의 개최



* UN CGPCS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적퇴치 국제공조를 위해 창설('09.1) 제3작업반(의장 : 韓國)은 소말리아 해역 통항선박들의 안전운항 수칙 개정 담당

- 해적피해 예방지침(BMP) 이행 제고, 무장보안요원 · 무장보안업체 활용, 피랍선원의 보호 및 인도적 복지방안 마련 등 논의 추진

- IMO 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 참여 및 민간무장보안 요원의 인증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13.6)

나. 아시아해적방지협정(ReCAAP)을 통한 역내 국가간 공조

- 말라카 · 싱가포르 해협 등 아시아지역 해적퇴치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사업 추진 등 역내 국가간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 · 강화

* 싱가포르 소재 ReCAAP 사무국에 1억원 기술협력기금 지원('13.2)

- ReCAAP 관리이사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을 통해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13.3, '13.9)

다. 아덴만 함대와 선박위치정보(LRIT) 공유로 신속 구조체제 유지

- 청해부대(함정), EU 연합함대 등과 국적선박의 위치 실시간 공유 및 해적 출몰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24시간 정밀 모니터링 추진

라. 해적 정보 실시간 제공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통해 해적모션 및 해적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내 관련 업 · 단체에 제공

중점 5-5 항로표지 국제 교류협력 확대

-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전략 등 논의·마련을 위해 국제항로표지 협회 제55차 이사회*(13.5/부산), 제22차 극동전파표지협의회**(13.10/제주) 개최

* (의제) '14~'18년 항로표지 발전전략, 국제 항로표지 지침(Guideline) 및 권고(Recommendation), 주요 국제행사 계획안 등 승인

** (의제) 극동지역에서 항해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로표지 협력방안 논의, 회원국 전파표지 개발현황 소개 및 기술교류 등

- 한·중 해양교통시설 기술협력회의 개최('13.6~7/중국)

- 양국간 기술교류 확대를 위해 관계 공무원 교환근무, 항로표지선 상호 방문 및 자매결연 등대 확대 등 추진

중점 5-6 해양·수산 관계자 해사안전 의식 제고

가. 취약선원 안전복지 서비스 향상

☐ 현장 밀착형 안전운항 캠페인 전개

- ‘해양안전의 날’(매월1일)을 정하고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원·선주 등에게 안전정보 동시 다발 제공(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

- 공단의 안전전담 인력·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선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상안전 교육·홍보 활동 확대

* 법적근거 : 「선박안전법」 제46조 제9호

☐ 도로교통·건설안전 등 타 분야의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양안전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13.8)

나. ‘해양안전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개최

☐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업체에 숨어 있는 안전경영 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안전문화 확산 도모

- 경진대회 개최방법을 선원·선박·안전관리체계·항만국 통제·하역·시운전 등으로 다변화하고 요소별 우수사례 발굴·전파(‘13.11)

* 발굴된 우수사례는 사례집 등 배포 등을 통하여 관련 업계에 전파

☐ 해사안전 정책 실무를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현장중심 해사안전정책 발굴 및 개선과제 도출(‘13.5)

다. 해사안전 업무 영문 홍보책자 발간

- ☐ 우리나라의 해사안전 조직, 업무 및 해사안전 활동을 IMO, 양·다자 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책자 제작('13.3)

라. 해양사고 예방 어업인 전진대회 개최 (농수산부)

- ☐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고 다발해역의 항·포구를 선정하여 교육*(연 2회) 및 어선 안전의 날 행사 실시(192회)

* 5톤 미만 어선원 대상 기본항법 및 해상 생존술 방문 교육

마. 해양사고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배포

- ☐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잠재상황인 준해양사고의 교훈사례를 알기 쉽게 삽화형태로 제작하여 업계 전파
 - '12년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책자 발간('13. 상반기, 2천부)

중점 5-7 대국민 해사안전 생활화

가. 해양·수산계 학생들에 대한 해사안전 교육 추진

-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의 중요성, 사고방지를 위한 기초지식 등 교육 추진

* 해양·수산계 학교 현황

- (해양) 국립부산해사고, 국립인천해사고,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 (수산) 인천해양과학고, 경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 압해고, 여수해양과학고, 목포대, 부경대, 군산대, 전남대, 경남대 등

나. 해사안전정책 대국민 홍보 및 선사에 정보제공 확대

- 트위터, 블로그 등 개인 SNS 활용으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최신 국제동향, 협약 개정사항 등에 관한 선사 설명회 개최

다. 등대를 활용한 대국민 해사안전 체험공간 마련

- 영도등대 등 23개 유인등대를 '등대 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

- 전망대·홍보관·야외조형물 시설 정비, 방문객의 흥미유발·편의 시설 확충(자연생태, 학습패널 등) 및 노후시설 교체

- 등대 해양문화공간 위탁운영 확대(3→5개소)

* (현행) 영도, 오동도, 우도등대 → (추가) 속초, 간절곶 등대

< '13년 주요 문화사업 >

구분	문화 특화 시설	주요 행사
영도 등대	갤러리, 자연사 전시실, 야외 공연장, 입체 영사관, 해양도서실	See & Sea 갤러리 운영, 계절별 음악회, 여름등대학교 등

구분	문화 특화 시설	주요 행사
오동도 등대	홍보관, 광장 및 야외무대	청소년 문화행사, 사진전시회, 음악회 등
우도 등대	홍보관, 전시실, 영상실	계절별 음악회, 등대체험학습, 전시회 등
속초 등대	홍보관, 전망대, 영상관, 홍보마당	
간절곶 등대	홍보관, 전망대, 잔디광장, 조형등탑	

□ 등대를 이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및 방문객 등에게 각종 볼거리 제공

* 음악회, 전시회, 미술갤러리, 해양도서관, 여름등대학교 및 일일 등대장 체험 등



라. 무인등대를 종합해양수산 교통센터로 조성

□ 국토 끝단 무인등대를 선박안전운항, 해양환경보존 및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종합해양수산 교통센터*로 조성('13.12)

* (대상) 인천 목덕도, 대산 격렬비열도, 목포 칠발도, 마산 홍도 등

- 어업활동에 지친 어업인 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긴급 상황 발생시 피난시설, 어업활동(어선대피소, 급유소, 비상구급약품) 지원
- 등대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여 레저보트, 낚시어선 이용객 들을 위한 마리나 중계지로 활용

일반 5-1 해양사고 조사 · 심판 국제협력 강화

가.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사고 조사기술 향상

- 사고조사 능력 향상을 위한 '제2회 해양사고조사 국제 컨퍼런스 개최('13.2분기)' 및 조사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 해양사고 조사 국제 동향·정보수집 및 사고 발생시 긴밀한 공조 체제 가동을 위해 국제회의* 적극적 대응

* FSI('13.3), MAIIF('13.6월, 10월), NAV('13.9)

나. 양자협력을 통한 주변국과의 조사협력 강화

☐ 한·중간 해양사고 조사의 평가 및 협력을 위한 정기적 회의 개최, 조사관 교환근무 등 지속 추진

* 한중 조사협력 회의('13.6), 한중 해양사고 조사관 교환근무('13.10)

다. IMO 해양조사코드의 이행 정착

☐ 정부의 국제적 해양사고 조사 역량 강화

-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기술 역량 제고와 해양사고 원인 분석의 고도화 등을 위해 「IMO 해양사고 조사 코드*」 적극 수용

* '08년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해양사고조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국가 간 협조방안, 정보 공유 방안 등을 규정

☐ 해양사고 조사 코드에 따른 사고조사·분석 전담부서 운영

- 조사 코드 대상사고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 조사부서의 구성·운영 및 전문 조사 인력 확보
- IMO 조사관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조사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반 5-2 대형 해양사고 백서 및 사고예방 지식 보급

□ 수요자 중심의 해양사고 예방 지식 보급

- 사고빈발 선종, 사고원인, 피해현황, 교훈 등 내항선박 종사자, 어업인 등의 관점에서 알기 쉬운 영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 해양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방침결정('13.3), 공개입찰('13.4), 프로그램 제작('13.12)

일반 5-3 미가입 국제협약 효과적 관리

□ IMO 협약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정부의 미가입 IMO 협약*별 해당 소관부처, 유관기관 식별 및 가입 필요성 검토를 통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13.9)

* 미가입 IMO 협약 : CSC Amend 93, SFV Prot 93, STCF-F 95, IMSO Amend 06/08, Intervention Convention 69 등 24개 협약

□ 미가입 협약에 대한 종합분석을 위한 협약별 T/F팀 구성('13.3)

- IMO 관련 국제동향 및 협약 비준 현황 파악,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방안 마련

중점 6-1 해양사고 수색·구난 능력 제고

가. 해상 수색·구조 장비 확충

-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인명구조 장비 확보를 위한 구조장비 및 해상 계류시설 추가 확보(2,315 백만원)

* 122구조대 고속보트 1척, 고속제트보트 2척, 수상오토바이 10대, 해상계류시설 2개

나. 민·관 수난구조 공조체계 강화

- ☐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해 지역 민간 해양구조대와 협력 강화
 - 해경과 민간 해양구조대간 협력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민간 해양구조대의 활성화 및 출동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다. 해양긴급전화 122 활성화 및 122구조대 직무훈련 강화

- ☐ 다양한 해양사건, 사고의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해 '122 해양긴급 번호 시스템' 유지·보수
- ☐ 122구조대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조대 특수신체검사,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직원에 대한 현지 적응 훈련 실시

라. 해양 응급의료체계 개선

- ☐ 해양 응급환자 긴급 후송을 위한 회전익 항공기 2대 추가 배치
- ☐ 함정과 응급 의료기관간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운영을 위한 응급 구조사 양성
 - 해양경찰학교 자체 양성(60명), 국군의무학교 위탁교육(20명) 실시

중점 6-2 해양사고 위기관리체제 정비

가. 해양사고 위기관리체제 구축

□ 해양 위기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대규모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점검('13.10)
- 풍수해(태풍) 내습 대비 위기수준별 대응체계 수립·시행('13.6~10)
 - * 태풍이 경계구역(북위 25도, 동경 135도 서쪽) 진입 시 비상대책반 가동
 - * 경계구역 진입(감시·대응, 국토해양부) → 남해안권 진입(비상근무,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 태풍주의보·경보(국토해양부 비상대책반 운영)

□ 위기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대응체계 정비

-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및 관계 기관 상황관리 조직과의 비상 연락망 정비('13.6)
-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해양사고 영상전송시스템*과 해양안전종합정보 시스템 연계('13.5)



* 250톤급 이상 해경 함정(약 72척)에 탑재된 CCTV를 이용, 사고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나. 지능형 구난기술 개발

□ 해양사고 초기 대응 매뉴얼, 손상선체 응급조치 및 침몰선체 위치 예측 기술, 구난 지원을 위한 지능형 구난기술 개발추진

- 지능형 구난기술 개발*(3차년도) 추진

* 연구 기관/기간/예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3.9~'14.8 / 350백만원

다. 기관별 위기관리 체제 유지관리

- 사고초기 가용자원의 최대 활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업·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사고대응 매뉴얼 개선 등 추진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내용
지방해양환경청	부산청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자원현황 파악('13.2) ○ 「해양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수정·보완('13.3) ○ 「해양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숙지교육 및 훈련 실시(연1회)
	인천청	○ 구난업체, 예선, 도선사 등 지역내 민관 가용자원 일제조사 ○ 가용자원의 지원체계 확립 및 해양사고 현장위기 대응매뉴얼에 반영
	여수청	○ 해양사고 발생 현황 보고 및 수습요령 수정·보완 ○ 유관기관 및 업·단체 비상연락망 최신화 ○ 주요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 (충돌·좌초) 예방지원을 위한 가용 예인선 확보 및 지원 - (오염)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환경관리공단 방제정 운영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시행 시 적극 참여 - 재난대응안전훈련 및 을지훈련 시행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마산청	○ 해양사고 보고 및 수습요령 수정·보완 ○ 유관기관 및 업·단체 비상연락망 최신화 ○ 주요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 (충돌·좌초) 예방지원을 위한 가용 예인선 확보 및 지원 - (오염)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환경관리공단 방제정 운영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시행 시 적극 참여 - 재난대응안전훈련 및 을지훈련 시행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동해청	○ 해양사고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최신화
	군산청	○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비상연락망 등 민간자원 공조체제 구축·유지 - 예선, 항만공사 작업선 등 비상연락망 구축·유지 - 해경,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시 해상재난 훈련 등 각종 훈련 및 간담회 시 민간 참여 유도 ○ 사고 발생 시 민간전문가 활용 정확한 원인 규명
	포항청	○ 해양사고 발생 시 자원동원을 위한 민간자원 조사('13.3) ○ 비상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13.3) ○ 해양사고 위기대응 현장 매뉴얼 수정·보완
	평택청	○ 평택당진항 민관합동 결함선박 감시체제 운영 ○ 결함선박 신고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기관명		주요 내용
	울산청	○ 유관기관 및 업·단체 주기적 비상연락망 최신화(분기별 1회) ○ 해상교통통신원 간담회 개최('13.12.)
	대산청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유지 ○ 주요 해양사고별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 (충돌·좌초) 예방지원을 위한 가용 예인선 확보 및 지원 - (오염)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정 운영지원 - (검사) 사고 선박에 대한 신속한 감항능력 평가
	목포청	○ 민간 자원 활용을 위한 가용자원 조사 - 예인선, 방제선, 도선사 및 선박검사원 등 ○ 해양사고 종류별 민간 자원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 (충돌) 예인선, 오염(방제선) 등 ○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구축 - 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검사기관, 도선사 등
지 자 체	부산광역시	○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확립 ○ 유류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 시 수습반 편성운영 및 신속한 방제로 오염피해 최소화 ○ 해양오염사고 방제장비, 물품 및 방제인력 확보 ○ 해양사고 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사건에 대한 기록 유지
	울산광역시	○ 수협, 어업무선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 유관기관 및 업종별 어업단체 종사자간 간담회 개최(연 2회) ○ 어항시설(방파제) 안전가드라인 설치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강원도	○ 해양사고 발생 시 수협, 어촌계 등 민간자원 적극 활용 - 해양사고 민간자율구조대 육성 및 지원 ○ 항, 포구별 어촌계 대상 재해예방 방송시설 지원 ○ 항만시설 운영사, 선사, 항만종사업체 등을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 및 비상연락망 유지
	충청남도	○ 취약해역 사고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 오염사고 사전대비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유관 업·단체 등)
	경상남도	○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 비상연락망 최신화 등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를 통한 위기 관리체계 사전 정비 및 이행태세 확립 ○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도 강화
항 만 공 사	부산	○ BPA 관할 해역내 선박사고 수습 매뉴얼 작성 및 유관 업·단체 배포('13.1)
	여수광양	○ 사고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최신화 ○ 비상연락망 정비 ○ 긴급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수립

중점 6-3 친환경적 해안방제시스템 구축 및 방제역량 강화

가. 대형 오염사고 방제 지휘시스템 구축 (해경청)

- ☐ 대형 오염사고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제상황관리시스템 개발·운영
 - 사고발생, 방제 조치사항 등 방제상황을 관리·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방제조치기관 간 방제상황 정보 공유
- ☐ 방제 역량강화 합동 훈련 등 추진
 - 인천, 평택 해안의 방제특성 정보, 방제자원 등 D/B 구축 및 해경,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합동 방제 훈련 실시

나. 해양·해안 방제장비 보강 (해경청)

- ☐ 방제작업 시 해상기름 회수량 증대를 위한 방제장비 및 소모품 확보(5,553 백만원)
 - 중·소형 방제정 3척(노후선 교체 1척, 신조 2척) 건조·운영
 - 비치 크리너 확보, 노후 유회수기 교체 및 소모성 방제자재 비축



다.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 (해경청, 해양환경관리공단)

- ☐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정비
 - 지자체 해안방제 지원 방안, 해안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관계기관 역할 재조정 등 반영
 - 방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 정비
- ☐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대규모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에 따른 공단 기본방제계획서(지사방제대응계획서) 개정

-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간 업무협력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통합방제지휘 통신체계 구축 실무협의, 사고 사례 공유 및 연락 체계 상시 점검 등

라. 방제선 등 위탁배치 소요량 검토 및 방제자원 재배치

- 주요 항만별 법정 방제능력 검토 및 방제장비 확보계획 수립
 - 해양오염 발생 시 효율적인 초동 방제조치를 위한 방제자원의 최적 배치 방안 마련·시행
 - 300톤급 방제선 2척 건조 기본설계, 노후화된 방제장비의 신규 구입 및 기존 방제장비 성능개선 추진

마. 유류오염 보상제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법령 위반선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보장계약증명서 재발급 지연, 분담유량 허위보고, 선내 또는 사무소에 보장계약증명서 미비치 등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 정립
-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항만국통제(PSC) 점검 시 보장계약증서의 선내 비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 보장계약증명서 미비치 선박에 대한 출항정지 사전 통보절차 마련
 - * 선박재원, 보장계약해지 사유, 통제사유, 통보기관 대상 등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미 가입선박에 대하여도 선주 책임 제한 보장 추진

중점 6-4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 체제 구축

가. HNS 위기관리 점검체제 정비 (해경청)

- ☐ HNS 사고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유해물질별 민관합동 사고대응 훈련 및 대응팀 팀워크 훈련 실시(연15회)
- ☐ 해양오염 방제대응 경진대회 개최
 - HNS 대응팀 훈련 친숙도, 장비운영 능력 및 운영실태 등 평가

나. HNS 사고 대응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관계 기관·업체와 사고 공동대응 및 지원·협력 강화 (해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등 MOU 체결 기관과의 실무회의 개최
 - 위험유해물질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 ☐ 해양오염대응정보시스템(MAMIS) 활용도 제고 (해경청)
 - HNS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효율적인 사고 대응
- ☐ HNS 관련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자료 데이터화 및 간담회를 통한 대국민 HNS 정보 공유 (해양환경관리공단)
 - * (주관) 해양환경관리공단, (대상) 정유회사, 위험·유해물질 제조사 등
- ☐ 국내 HNS 방제 기반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 HNS 방제분담금(또는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HNS 방제 시스템 벤치마킹 및 연구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외 협력기관의 관련 자료 조사, 법령 및 제도 검토 등

다. HNS 사고대응 요원 양성 및 물질별 지원체제 구축

☐ 위험유해물질사고 현장대응팀 전문교육 강화 (해경청)

- 해경학교에 실습위주의 「HNS 사고대응 과정」 운영으로 현장 실행력 확보
- 외부기관(환경부, 소방방재청, 인제대 등)에 위탁교육 확대로 다양한 기술 확보

☐ HNS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과목 개설 및 내실화 추진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환경개발교육원’을 통해 토론·실습 위주의 HNS 전문방제 과정 개설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해외 주요 HNS 오염사례 동향, 주요 오염물질 및 유관기관 사고 물질 정보 현황 등을 분석하여 HNS 물질별 사고 지원체제 마련

라. 해양 HNS 사고대응장비 추가 확보 (해경청, 해양환경관리공단)

☐ 위험유해물질사고 대응장비 지속 추가 확보

- 누출봉쇄장비 등 사고현장대응장비 신규 구매
- 창원해경서 개서에 따른 개인 보호장비 등 추가 확보

- 해외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최신 HNS 장비 현황, 장비별 장단점 파악 및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장비 분석
- 단계적인 국내 도입 방안 마련

마. 국제협약(HNS협약) 발효대비 대응방안 마련

- HNS 협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보험 부보방안 및 화물수령자의 분담금 징수체계 등 국내 손해배상제도 정비방안 마련
- LNG 등 주요 수입국으로 HNS협약 발효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입여부 검토
- HNS 협약 체약국에 귀항하는 우리나라 선박 책임보험 가입 추진
- 총톤수 200톤 초과선박은 책임보험가입 방안 마련 및 홍보 조치

중점 6-5 선박 보안관리 강화

□ 보안사고 대응 위기관리체제 정비

- 보안사건 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보안등급별 세부조치 사항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3.6)



□ 선박보안 평가 및 심사기법 개발 등 보안역량 강화

- 선박보안 심사관 기본자격 교육 실시('13.5)

* 위탁기관/대상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지방해양항만청 검사관 등

- 보안심사원 심사업무 지원 및 업무 통일화를 위한 '선박 보안심사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13.11)

중점 6-6 해적대응체제 유지·강화

가. 선사의 대응능력 제고

☐ 對해적 민관군 합동대책반 구성·운영

- 관계기관 및 업·단체의 역할분담과 긴밀 협조체계 구축, 유사시 신속 대응·조치를 위한 공조체계 공고화

☐ 선사 및 선박의 자구책 이행실태 현장점검('13.6)

- 위험해역 통항지침 숙지도, 비상대응 계획수립·시행, 비상연락 체계구축, 교육훈련 등 자발적 대응역량 관리·감독

☐ 해적대응요령 교육·훈련 매뉴얼 CD 제작(60백만원)

나. 해적퇴치 능력 향상을 위한 해적대응시설 지원책 강화

☐ 청해부대(함정)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운영(100백만원)

- * 파견 함정 시스템 유지보수(철거·설치 3회 및 기능 개선)

☐ 선박의 해적퇴치용 안전시설 개발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해적퇴치를 위한 선박의 안전활동 및 시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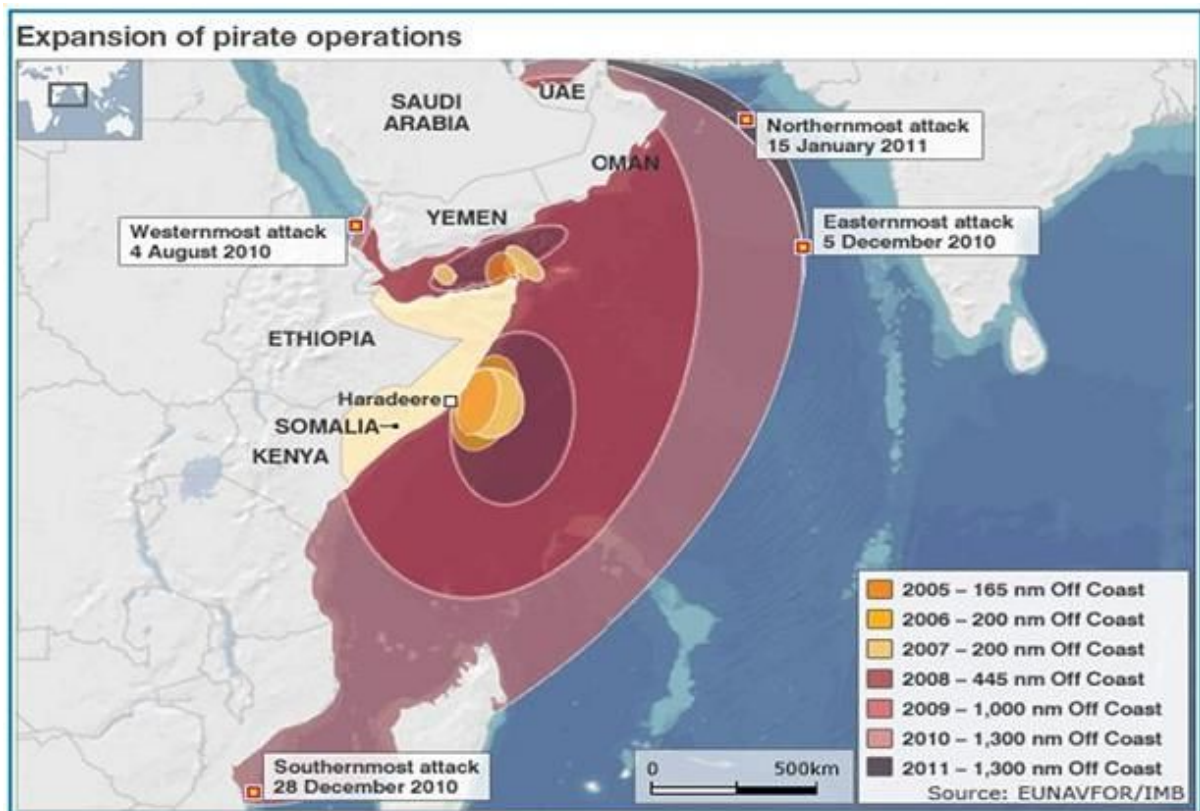
다. 분기별 해적사고 통계 분석 · 전파

- UN, IMO, ReCAAP, IMB PRC 등으로부터 해적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통해 업계와 정보 공유

라. 해적행위의 광역화 경향에 따른 해적위험해역 확대 · 조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해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원 대피 설치대상 선박(위험해역 범위) 고시 위임 규정 신설('13.4)

<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



일반 6-1 해양사고에 대한 민간 대응기반 강화

가. 민간 방제세력과 협력체계 강화 (해경청)

☐ 어민과 함께 하는 '어촌계 자율 방제대' 운영 효율화

- 유흡착재 및 유처리제 등 방제자재 사용방법 교육
-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훈련 실시
- 창설 자율 방제대에 유흡착재 및 오일펜스 등 무상지원
- 우수 자율 방제대 선정·포상, 훈련 참석자 조력비 지급, 봉사활동 시간 부여 등

☐ 중요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 방제세력과 협력체계 강화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 구난업체, 유조선사 등 협력체계 유지 및 우수업체와 협약 체결
 - * 사고 발생 시 협약체결 업체를 오염사고 현장에 우선 동원
- 해안 방제자원 신속동원 태세 유지
 - * 관심도 제고 및 신속 동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점검('13.3)
 - * 방제장비 동원, 파공부위 및 적재유 이적 훈련 중점 실시('13.5~6)
- 유류오염사고 시 방제비용 선지급 방안 마련 및 매뉴얼 개발

☐ 민간 방제자원 신속 동원태세 유지

- 대규모 오염사고 시 사고 현장에 방제기자재 신속 동원
 -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 정유사 등 비상연락망 및 신속 동원태세 유지

나. 자원봉사자 및 민간 방제업체 교육시스템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 '13년도 주요 정유사 실무자 대상 전문방제교육 실시

-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실습형 교육 실시

일반 6-2 방제전문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 강화

□ 해양오염 방제 훈련장 확보('13년)를 통한 체계적 교육기반 마련

- 해안특성 및 수조를 이용한 장비운용, 오일펜스 전장 및 유흡착재 살포 등 실습 훈련 실시
-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전체에 대한 대응 및 가상 방제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해양오염 방제시뮬레이션 훈련 실시

□ 방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제교육 활성화

- 방제전문 교육과정을 단계별 구분·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 제고
 - * 해양방제 실무·전문과정 및 해양환경관리자과정 등 자체 교육실시
 - * 대형선박 오염 대비·대응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전문교육 위탁
- 유해물질사고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 해양오염방제과정 등에 위험·유해물질 과목 추가 등 강화
 - * 유해물질 교육을 실습위주의 실무형 교육으로 개편
- 해양오염 인식 제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대상 환경 교육
 -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안방제 이론 및 현장 실습교육 실시
 - * 초·중등 교사 대상 방제일반 등 해양환경 직무교육

□ 해역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방제훈련

-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방제실행계획 점검을 위한 도상훈련 실시
 - * 실제 오염사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제전략수립 결과물 작성
 - * 해양오염 상황처리 훈련 및 관계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운영
-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통한 해양오염 대응능력 제고
 - * 위험유해물질 특성 파악 및 보호·탐지장비 운용술 숙지 훈련
 - * 민관합동방제훈련을 통해 해양오염 대비 유관기관 공조체제 점검
 - * 지자체 방제기술지원을 위한 해안 방제 합동훈련 실시

일반 6-3 **해양시설 유류오염 대응체제 구축**

- ‘해양시설 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기존 ‘해양시설 오염 비상계획서’는 자체 변경 권고
 - 해양시설의 출입검사 시 ‘해양시설 오염 비상계획서’ 추가 포함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투자계획

V. 투자계획(안)

□ '13년도 해사안전 시행계획의 투자소요는 약 5,712억 원

- 국토해양부 3,900억 원(68.3%), 농림수산식품부 933억 원(16.3%), 공공기관* 114억 원(2.0%), 지방자치단체 326억 원(5.7%) 등

*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상교통 환경 구축에 전체 예산의 70.1% 소요

- '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에 714억 원
- '추진과제 2. 선박 안전성 강화'에 543억 원
- '추진과제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에 260억 원
- '추진과제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에 4,003억 원
- '추진과제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에 22억 원
- '추진과제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에 168억 원

< '13년도 사업별 투자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종사자 안전	선박 안전성	안전관리 시스템	해상교통 환경	국제협력 안전문화	비상대응 체계	합계
합계 (비중)	71,486 (12.5)	54,302 (9.5)	26,000 (4.6)	400,372 (70.1)	2,233 (0.4)	16,841 (2.9)	571,234 (100.0)
국토해양부	10,608	14,939	2,751	358,966	2,233	526	390,023
농림수산식품부	57,540	21,176	12,780	1,776	0	50	93,322
지식경제부	0	10,000	0	6,800	0	0	16,800
해양경찰청	0	0	0	4,200	0	14,196	18,396
기상청	0	0	0	8,615	0	0	8,615
지자체	3,338	7,717	10,314	11,257	0	0	32,626
공공기관	0	470	155	8,758	0	2,069	11,452

부
임



추진과제 1. 선박 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단위: 백만원)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1-1. 인적과실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내실화		132.2
가. 인적과실 저감 정책기반 구축	국토해양부	-
나. 해상종사자 현장중심 교육 강화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농림수산식품부	82.2
다. 사고사례 교육자료 개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7
라. 해양사고 관련자 징계 집행유예 교육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마. 주요 사고사례 등을 어선원에 전파	농림수산식품부	43
중점 1-2. 중소형 선박 해기사 운항능력 제고		1,119
가. 6급 항해사 등 면허취득 교육 강화	국토해양부	1,119
나. 예인선 신규 항해사에 대한 운항교육 시행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중점 1-3. 예인선·위험물 운송선박의 최저승무기준 현실화		-
가. 연안수역 화물운송용 예인선(98척)의 승무기준 개선에 따른 선사의 이행여부 확인	국토해양부	-
중점 1-4. 우수 선원 고용여건 개선		-
가. 해사고 졸업생 승선근무예비역 병역특례 정원 확보	국토해양부 병무청 협조	-
중점 1-5. 선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65,739
가. 중장기 선원인력 수급 및 선원복지 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
나. 해사노동인증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
다. 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한 선원 근로환경 개선	국토해양부 선원복지고용센터	-
라. 선원 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국토해양부	5,560
마. 5톤 미만 어선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보험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60,061
바. 선원 비과세 확대	국토해양부	-
사. 과로시 항해당직 수행 금지 조항 신설	국토해양부	20
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98
중점 1-6 외국인 선원의 근로 여건 향상		-
가. 제3국의 선원공급원 구축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
나. 중소선사 공동 해외 선원인력 양성 및 교육	국토해양부	-
다. 외국인 선원 권익보호 및 안전교육시행	국토해양부	-
라. 외국인 선원 콜 센터 운영	국토해양부	-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1-7.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774
가. 어선원 안전교육의 내실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774
나. 5톤 미만 어선원 대상 기본항법 등 교육	선박안전기술공단	-
다.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
라. 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
중점 1-8. 해사 전문인력 양성		3,722
가. 우수 고급 해기사의 양성 확대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3,022
나. 새로운 운항시스템 및 운항기술을 습득한 해기사 양성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다. 교육기관의 역량강화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
라.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및 해외진출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박관리업협회	-
마. 해양교통·위성항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토해양부	500
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토해양부	200
일반 1-1. 시운전 선박 승무자격 신설 및 어선원 승무기준 개편		-
가. 시운전 선박의 항해사 승무자격 신설	국토해양부	-
나. 어선원 승무기준의 국제화 추진	국토해양부	-
일반 1-2. 수면비행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교육체계 확립		-
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교육과정 개발	국토해양부	-
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제도 개선	해양경찰청	-
합 계		71,486.2

추진과제 2. 선박 안정성 강화

(단위: 백만원)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2-1. 중·소형 유조선 안전 제고		-
가. 화주와 선사 간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유도	국토해양부	-
나. 내항 유조선의 자율적 이중선체화 유도	국토해양부	-
중점 2-2. 내항선·어선에 안전관련 항해장비 설치 확대		47
가. 내항 여객선·화물선에 대한 항해장비 설치 확대	국토해양부	-
나. 어선원에 위치발신장치 확대 및 사용법 교육 강화		47
①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 위치 발신장치' 무상보급 추진	해양경찰청	-
② 블루웨이브 서비스(수협)시 무선설비 사용법 교육 병행	농림수산식품부	47
중점 2-3. 소형선용 통합 항해장비 개발		1,800
가. 육·해상 간 쌍방향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선박용 해양안전 통합 단말기 및 관련기술 개발 추진	국토해양부	1,800
중점 2-4. 체계적 해양안전 기술개발 추진		22,475
가. 해양안전 기술개발 과제 지속 발굴·추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22,475
나.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
다. 선박 온실가스 저감 대응	국토해양부	-
라. 블루 네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추진	국토해양부	-
마.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	국토해양부	-
중점 2-5. 수면비행선박 안전운항 대책 마련		-
가. 수면비행선박(WIG) 관련 국내외 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
나. 수면비행선박 안전운항 대책 마련	국토해양부	-
① 제조사의 시험 운항 전 선박 자체, 운항해역의 교통 안전성 검증을 위한 민·관 합동 TF 개최 및 안전 대책 마련	국토해양부	-
② 내항여객 운송에 대비, 운항관리규정 개발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
중점 2-6. 노후 선박의 안전검사 강화		28,465.6
가. 선령 20년 이상 내항여객선 검사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
나. 길이 24미터 이상, 선령 30년 이상 내항화물선 검사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
다. 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검사원 자질 및 역량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400
라. 검사장비 최신화	선박안전기술공단	70
마. 어선 안전검사 기준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
바. 노후기관 교체 및 노후어선 감척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① 노후 어선기관·장비 개량 사업 추진	농수산식품부 지자체	6,676
	③ 연근해 어선 및 근해어선 감척사업	농수산식품부 지자체	21,319.6
중점 2-7.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
가. 선박검사제도의 선진화·국제화 추진		국토해양부	-
나. 선박검사 관련 산업 육성·지원 추진		국토해양부	-
다. 예인선의 예인장비 안전성 제고		국토해양부	-
라. 정부권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
중점 2-8. 안전취약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건조 자금 지원			450
가. 대형 외항선의 신조를 위한 금융기반 강화		국토해양부	-
나. 내항선박의 신조자금 지원체제 구축		국토해양부	450
일반 2-1. 내항 취역선 현장 안전점검 강화			14
가. 내항화물선 안전 전담반 운영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14
나. 전담인력 확보 추진		국토해양부	-
일반 2-2.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대응 및 차세대 선박운송 기술 개발			200
가. GBS 기능요건을 반영한 단일 공통구조규칙 소프트웨어 개발		국토해양부 (한국선급)	-
나. NGH(Natural Gas Hydrate) 운송선박의 핵심기술 개발 추진		국토해양부	200
다. LNG 연료 추진선박 출현에 대응한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
일반 2-3.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가.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운영 내실화		국토해양부	-
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정비		국토해양부	-
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
일반 2-4. 소형어선의 생존성 강화			850
가. 개량형 구명동의(Life-jacket) 보급·확대			500
① 상시착용 구명동의(개량형 팽창식) 보급		농림수산식품부	500
② 개량형 구명동의를 소형내항선으로 확대 추진		국토해양부	-
나. 구명뗏목 사후관리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
다. 기상악화 대비 사고예방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인천시, 강원도	350
일반 2-5. 여객 이용시설 등에 노약자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강화			-
가.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국토해양부	-
합 계			54,301.6

추진과제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단위: 백만원)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3-1. 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		2
가. 내항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국토해양부	-
나. 인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제 개선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다. 사고선사와 선박 특별심사 실시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2
라. 예부선 선·화주 협업 증진	국토해양부	-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사 대형화·전문화		-
가.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국토해양부	-
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장 감독 강화	국토해양부	-
다. 안전관리자 교육 및 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
라. 안전관리사 제도도입 방안 검토	국토해양부	-
중점 3-3.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강화		-
가.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시책 수립·시행	국토해양부	-
나. 해상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중점 3-4.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
가.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혜택 제공 추진	국토해양부	-
중점 3-5. 관공선 운영 효율화 추진		-
가.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운행을 방안 검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
중점 3-6. 지자체 등 해사안전관리 조직 확충 및 역량 강화		35,700
가. 지자체 해사안전 공무원 교육 강화	지자체	-
나. 연안항·마리나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 등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21,594
다.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안전 기능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1,500
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해양사고방지 및 전문 연구기능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150
마. 부산지역 내항선원 안전 멘토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중점 3-7. 국적선 안전관리 우수 국가 유지 및 항만국통제(PSC) 강화		4
가. 국적선의 국제적 안전평가 우수등급 유지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2
나. 국내 입항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 강화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2
중점 3-8.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
가. 공익성과 효율성을 갖춘 안전진단제도의 시행으로 해상교통 위해 환경 및 안전 사각지대 사전 예방 도모	국토해양부	-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일반 3-1. 선박검사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
가. 취역선박별 사고 관리체계 구축	선박안전기술공단	-
나. 어선·내항선의 사고시 기술지원체제 구축	선박안전기술공단	-
일반 3-2.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150
가.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 공무원 안전교육 강화	국토해양부	-
나.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지속 시행	국토해양부	150
일반 3-3. 민간 자율적인 출항·운항 통제 강화		-
가. 민간의 자율 운항통제 확산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
일반 3-4. 수상레저기구 등록 관리 강화		-
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홍보	해양경찰청	-
나. 수상레저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단일 등록체계 구축	해양경찰청	-
일반 3-5. 항만내 선박급유선 등의 자체안전관리체제 확립		5
가.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상태 확인	국토해양부	-
나. 항만 공사 시행사에 의한 관리 강화	지방해양항만청	5
일반 3-6.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5
가.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	-
나. 국제여객선 취역분야 안전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
다. 유·도선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선박안전기술공단	5
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관리강화	경상남도 남해군 선박안전기술공단	-
마. 한강에서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	-
일반 3-7. 항로표지 관리체계 강화		2,590
가.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 추진	국토해양부	900
나. 총 893기의 부표류 관리체제 개선	국토해양부	1,690
일반 3-8. 경인아라뱃길 통항선박 관리 강화		-
가. 아라뱃길 운영 전담조직 편성·운영	한국수자원공사	-
합 계		26,000

추진과제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단위: 백만원)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4-1. 항만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14,205
가. 「개항질서 중점관리 지침」 수립·운영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10,852
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개선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3,353
중점 4-2. 선박항행 안전항로 확대 및 통항 위해요소 발굴·해소		168,769.2
가. 관할 항만내 위해요소 발굴·개선 추진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항만공사	8,672.2
나. 장기 정박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
다.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한 투자 강화	지방해양항만청 충청남도 부산항만공사	160,097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 등 적기 제거		32,719.5
가. 항로상 불법어로 합동 단속 및 계도 강화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1,243
나. 항행장애물 처리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253
다. 로프·페그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18,585.5
라. 침몰선·방치폐선 관리강화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12,638
중점 4-4. 해상교통관제(VTS) 인프라 확대		27,463
가. 해상교통관제(VTS) 시설 확충 및 현대화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23,178
나. 연안해역 교통관제 해역 확대	해양경찰청	4,200
다. 부산남항(연안항)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산시	85
중점 4-5. e-Nav 대응체제 마련 및 해양안전정보시스템 구축		355
가. e-Navigation를 위한 전자항법 시스템 구축 등	국토해양부	355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4-6. 미래형 표지정보 제공		104,545
가. 첨단 지상파 항법(e-Loran) 구축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15,000
나. 신개념 선박을 위한 해양교통시설 설치·운영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01
다. 해양교통시설 확충 및 노후 항로표지 시설 개량	국토해양부	89,444
라. 최적의 항로표지 서비스를 위한 관리 강화	지방해양항만청	-
중점 4-7. 정밀도 높은 해도 제작·보급		25,757
가. 연안해역에 기본 및 정밀조사 시행	국립해양조사원	11,843
나. 주요 항만해역에 대한 정밀 수로측량 실시	국립해양조사원	2,000
다. 국가어항 및 연안해역 대축척 해도 제작	국립해양조사원	1,979
라.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및 수로정보 서비스 개선	국립해양조사원 지식경제부	9,800
마. 최신 항해안전정보 지속적인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135
일반 4-1.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3,000
가. 계류시설 개발시 승·하선자 안전성 검토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나. 내항여객선 기항지 선착장 시설 개선	국토해양부	3,000
일반 4-2. 도선구역 합리적 조정		140
가. 부산항 안전도선 방안 마련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140
일반 4-3. 해양기상 예보 정확성 향상		8,615
가. 연안 해역에 해양 이상현상 감시체계 구축	기상청	4,086
나.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기상청	2,653
다. 해양기상관측 전용선박을 활용한 위험기상 사전 관측	기상청	1,781
라. 해양기상 예측 신뢰성 증진 및 예보 신속 전달	기상청	95
일반 4-4. 어장표지 표준화 및 항로표지 식별성 강화		-
가. 어장표지 표준화 추진	지자체	-
일반 4-5. 해수유동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14,803
가. 실시간 해양관측 및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14,717
나. 해수유동관측시스템 유지 및 운영	울산항만공사	86
합 계		400,371.7

추진전략 5.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 문화 정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5-1.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능력 제고		-
가. IMO 회원국 감사('16년 발효) 수감능력 배양	국토해양부	-
나. 전문 감사인력 확보	국토해양부	-
중점 5-2. 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302
가. IMO A그룹 이사국 7연임	국토해양부	2
나. IMO를 통한 산업계 국익창출 방안 모색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300
다. '국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
중점 5-3. 양·다자간 해사안전 국제협력 다변화		581
가.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국토해양부	45
나.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국토해양부	-
다. 해사안전 기술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국토해양부	536
중점 5-4.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423
가. UN 차원의 해적퇴치 방지 주도	국토해양부	423
나. 아시아해적방지협정(ReCAAP)을 통한 역내 국가간 공조	국토해양부	
다. 아덴만 함대와 선박위치정보(LRIT) 공유로 신속 구조 체제 유지	국토해양부	
라. 해적 정보 실시간 제공	국토해양부	
중점 5-5. 항로표지 국제 교류협력 확대		250
가. 국제항로표지협회 제55차 이사회, 제22차 극동전파표지 협의회 개최 및 한중 기술협력 회의 개최	국토해양부	250
중점 5-6. 해양·수산 관계자 해사안전 의식 제고		17
가. 취약선원 안전복지 서비스 향상	국토해양부	-
나. '해양안전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개최	국토해양부	-
다. 해사안전 업무 영문 홍보책자 발간	국토해양부	-
라. 해양사고 예방 어업인 전진대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
마. 해양사고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배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7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5-7. 대국민 해사안전 생활화		370
가. 해양·수산계 학생들에 대한 해사안전 교육 추진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
나. 해사안전정책 대국민 홍보 및 선사에 정보제공 확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다. 등대를 활용한 대국민 해사안전 체험공간 마련	국토해양부	370
라. 무인등대를 종합해양수산 교통센터로 조성	국토해양부	-
일반 1-1. 해양사고 조사·심판 국제협력 강화		190
가.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80
나. 양자협력을 통한 주변국과의 조사협력 강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0
다. IMO 해양조사코드의 이행 정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일반 5-2. 대형 해양사고 백서 및 사고예방 지식 보급		100
가. 수요자 중심의 해양사고 예방 지식 보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00
일반 5-3. 미가입 국제협약 효과적 관리		-
가. IMO 협약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	국토해양부	-
합 계		2,233

추진전략 6. 비상대응 체계의 선진화

(단위: 백만원)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6-1. 해양사고 수색·구난 능력 제고		6,145
가. 해양 수색구조 장비 확충	해양경찰청	2,315
나. 민·관 수난구조 공조체계 강화	해양경찰청	600
다. 해양긴급전화 122 활성화 및 122구조대 직무훈련 강화	해양경찰청	610
라. 해양 응급의료체계 개선	해양경찰청	2,620
중점 6-2. 해양사고 위기관리체제 정비		351
가. 해양사고 위기관리체제 구축	국토해양부	-
나. 지능형 구난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350
다. 기관별 위기관리 체제 유지관리	국토해양부 지자체 공공기관	1
중점 6-3. 친환경적 해안방제시스템 구축 및 방제역량 강화		9,537
가. 대형 오염 대비 통합 방제 지휘체계 구축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544
나. 해양·해안 방제장비 보강	해양경찰청	8,972
다.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
라. 방제선 등 위탁배치 소요량 검토 및 방제자원 재배치	해양환경관리공단	6
마. 유류오염 보상제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국토해양부	15
중점 6-4.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 체제 구축		182
가. HNS 위기관리 점검체제 정비	해양경찰청	15
나. HNS 사고 대응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
다. HNS 사고대응 요원 양성 및 물질별 지원체제 구축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
라. 해양 HNS 사고대응장비 추가 확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167
마. 국제협약(HNS협약) 발효대비 대응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

과제명	추진기관명	소요예산
중점 6-5. 선박 보안관리 강화		-
가. 보안사고 대응 위기관리체제 정비 등	국토해양부	-
중점 6-6. 해적대응체제 유지·강화		160
가. 선사의 대응능력 제고	국토해양부	60
나. 해적퇴치 능력 향상을 위한 해적대응시설 지원책 강화	국토해양부	100
다. 분기별 해적사고 통계 분석·전파	국토해양부	-
라. 해적행위의 광역화 경향에 따른 해적위험해역 확대 조정	국토해양부	-
일반 6-1. 해양사고에 대한 민간 대응기반 강화		80
가. 민간 방제세력과 협력체계 강화	해양경찰청	80
나. 자원봉사자 및 민간 방제업체 교육시스템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
일반 6-2. 방제전문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 강화		386
가. 해양오염 방제 훈련장 설치 등	해양경찰청	386
일반 6-3. 해양시설 유류오염 대응체제 구축		-
가. '해양시설 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업무에 대한 행정 지도 강화	해양경찰청	-
합 계		16,841